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21)

김덕기·김상진·이동임·정지운·정향진·주인중
윤여인·이창래·임경범·한애리·김윤아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K R I V E T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21)

김덕기·김상진·이동임·정지운·정향진·주인중
윤여인·이창래·임경범·한애리·김윤아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K R I V E T

머 리 말

정부는 국민의 전반적인 직업능력 향상과 더불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간의 경쟁 체제 도입을 통한 자격 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해 1997년 3월 27일 「자격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자격 제도 운영에 민간을 참여시킴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격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업종에서 민간자격이 개발 및 운영되었으며, 이들 자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격 중 국가자격 수준과 상응하는 자격에 한해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는 민간자격 공인제도가 마련되었다. 민간자격 공인제도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제도로서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민간자격 간의 상호 경쟁을 통해 품질관리를 유인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공인을 받기 위해 민간자격 관리자 간의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어 불필요한 민원 발생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민간자격 공인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발적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부처에서의 제도 지원, 일반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온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사업은 올해로 2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본 사업보고서는 2020년도 민간자격 공인제도 시행을 위한 조사·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그동안의 조사·연구 과정과 결과 및 향후 제도 개

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사업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1년도 기본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김덕기 박사가 책임자로서 김상진 박사, 이동임 박사, 정지운 박사, 정향진 박사, 주인중 박사, 윤여인 전문연구원, 이창래 선임전문원, 임경범 선임전문원, 한애리 전문연구원, 김윤아 연구원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다.

민간자격 공인제도가 우리나라 자격 제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부처 관계자와 조사·연구에 참여해 주신 관련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본 사업을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2021년 12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류 장 수

제목 차례

요 약_vii

제1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_1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배경	3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	6

제2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경과 및 조사 결과_19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경과	21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조사 결과	29
제3절 재공인 조사·연구 결과	36
제4절 공인 이전 취득자 완화 검정 및 변경 승인 조사·연구 결과	45

제3장 22년간 사업 추진 결과 분석_47

제1절 22년간(2000~2021년) 공인 신청 현황	49
제2절 22년간(2000~2021년) 공인 조사 결과	55
제3절 소관부처 및 기관별 현황	62
제4절 2021년도 공인 신청 민간자격의 주요 특징 분석	67
제5절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	71

제4장 결과 및 정책 제언_77

제1절 결과 79
제2절 정책 제언 85

참고문헌_91

본 저작물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2021년도에 작성하여 제공한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21)’(김덕기)이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www.krivet.re.kr)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 차례

〈표 2-1〉 2021년 공인 민간자격 신청 및 접수 현황	25
〈표 2-2〉 2021년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민간자격 현황	27
〈표 2-3〉 신규 공인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기준	31
〈표 2-4〉 공인 적합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32
〈표 2-5〉 주무부처별 현장조사 대상 종목 현황(신규 공인)	35
〈표 2-6〉 재공인 조사·연구 기준	38
〈표 2-7〉 공인 연장 추천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40
〈표 3-1〉 연도별 공인 신청 현황	50
〈표 3-2〉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자격 종목 수	53
〈표 3-3〉 공인 조사 결과 평가 점수별 현황	56
〈표 3-4〉 연도별 공인, 공인 만료 및 취소 현황	59
〈표 3-5〉 소관부처별 공인 민간자격 현황	62
〈표 3-6〉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별 자격 수	65
〈표 3-7〉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유형(법인 번호 분류상)	66
〈표 3-8〉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소재지	67
〈표 3-9〉 2021년 신규 공인 신청 자격의 공인 신청 경험	68
〈표 3-10〉 2021년 신규 공인 신청 민간자격 관리기관의 지역	68
〈표 3-11〉 최근 3년 재공인 신청 자격의 검정 현황(2018~2020년)	70

〈표 4-1〉 2021년 공인 민간자격 조사연구 결과	83
〈표 4-2〉 2021년 변경 승인 및 완화 검정 심사 결과	85
〈표 4-3〉 공인제도 주요 개선 방안	86

그림 차례

[그림 1-1] 민간자격 공인(신규 공인, 재공인 대상) 제도의 운영 구조	8
[그림 1-2] 민간자격 공인(연장 대상) 제도의 운영 구조	9
[그림 1-3]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절차	11
[그림 1-4] 연장 승인 조사 절차 및 경과	15
[그림 1-5] 변경 및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 심의 절차	16
[그림 2-1] 공인 신청 민간자격 주무부처 선정 과정	26
[그림 3-1] 연도별 공인 신청 추세	51
[그림 3-2] 연도별 평가 결과 추이(2000~2021년)	57
[그림 3-3] 연도별 공인자격의 누계	60
[그림 3-4] 연도별 공인율 변화 추이	61
[그림 4-1] 2020년과 2021년 공인 신청 결과(신규 공인, 재공인)	81
[그림 4-2] 2021년 공인 신청 자격의 이전 공인 신청 경험	82
[그림 4-3] 공인 조사연구 결과 비교(2020년, 2021년)	83
[그림 4-4] 공인 신청 횟수별 평균 서류심사 결과(접수)	84

요 약

1.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

- 정부는 산업구조의 변화 및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라 직업세계가 변화하는 현상에 대응하여 자격 제도가 일정 정도 국민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개편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격기본법」(1997. 3. 27., 법률 제5314호)과 「자격기본법 시행령」(1997. 8. 9., 대통령령 제15453호)을 제정함.
- 「자격기본법」에서는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에 민간자격의 공인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조사 등), 제29조(공인 기간의 연장), 제30조(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 제31조(공인 사항의 변경),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항 등

- 또한 본 조사·연구 사업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관 제4조(사업) 제5호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을 위한 검토 및 조사·연구”의 기관 정관에 따른 고유 사업으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2년째 지속 추진된 사업임.

- 이에 동 사업은 자격기본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의 공인을 위해 제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연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추진 내용 및 절차

-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등 조사 체계 계획 수립
-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 공고(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 및 접수
- 공인 신청 접수 종목에 대한 신청 자격 및 법적 요건 검토
- 신규 공인 신청 종목 조사
 - 서류심사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현장조사 실시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공인 신청 종목 조사(현장조사 실시)
- 공인 신청 자격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계,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
- 심사 결과 정리 및 민간자격 국가공인 대상 종목 추천
-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 결과 주무부처 송부
- 변경 승인 신청 공인자격,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 일부 면제 및 완화 검토 시행에 대한 적합 여부 심의 및 승인
-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결과 분석(2000~2021년)
- 결과 분석을 통한 차기 연도 사업 추진 계획 절차 수립 및 보완
-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질 향상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 제작
- 공인사업 추진 관련 정책 제언 및 향후 개선 방안 협의

3. 2021년도 민간자격 공인 신청 및 접수 현황

□ 신청 및 접수 기간

- 2021. 4. 15.(목)~ 4. 28.(수)

※ 변경 승인은 별도의 접수 기간을 두지 않고 상시 접수하였음.

□ 신청 기관 및 종목

- 신규 공인 및 재공인(연장 포함): 62개 종목, 50개 기관
 - 총 62개 종목 중 공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공인 및 연장 승인 접수 건은 34개 종목(24개 기관)이며, 신규 공인을 신청한 자격 종목은 28개(26개 기관)임.
- 2022년 5월 이전에 공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자격 중 자격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위해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재공인 대상 종목은 총 33개(23개 기관)임.

4. 신규 공인 신청 대상 종목의 조사·연구

□ 조사·연구 개요

- 신규 공인 서류심사는 민간자격 등록 여부, 공인 기준 충족 여부(1년 이상, 3회 이상의 검정 실적), 자격의 필요성, 자격 체계의 적합성, 조직 관리 및 운영, 자격 검정 및 취득자 관리를 중심으로 실시함.
- 신규 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위원은 각 종목별 체제 전문가, 재정 전문가, 내용 전문가 등 6~7명 내외로 구성함.
- 신규 공인 현장조사는 세부 평가 항목별 'F'가 없고, 항목별 평균

40% 이상이며, 서류심사 평가 점수(220점 만점)의 70%(154점) 이상을 얻은 종목에 한해 실시함.

- 공인 적합 추천 기준: 세부 평가 항목별 'F'가 없고, 항목별 평균 'D'(40%) 이하가 없으며, 환산 점수 총점이 70%(154점) 이상인 경우 임(평가 점수 기준 보통 이상).

□ 서류심사

- 대상 종목: 28개 종목(26개 기관)
- 심사 기간: 2021. 6. 7.(월) ~ 7. 5.(금)
- 심사위원 위촉 현황(98명)
 - 원내: 12명(각 팀 책임 8명, 지원 3명 포함)
 - 원외: 86명
 - 자격 종목별 검정 체제 심사위원: 12명
 - 자격 종목별 재정 전문가: 1명
 - 자격 종목별 내용 심사위원: 52명
 - 주무부처 담당자: 21명
- 서류심사 결과
 - 현장조사 대상 1개 종목(1개 기관) 선정

□ 현장조사

- 조사 대상
 - 서류심사 결과 세부 평가 항목별 'F'가 없고, 항목별 평균 'D'(40%) 이하가 없으며, 환산 점수 총점이 70%(154점) 이상인 1개 종목,

1개 기관

- 조사 기간: 2021. 7. 26.(월) ~ 8. 6.(금)
- 현장조사 위원 위촉 현황
 - 원내: 3명(각 팀 책임 1명, 지원 2명)
 - 원외: 5명
 - 자격 종목별 검정 체제 심사위원: 2명
 - 자격 종목별 내용 심사위원: 2명
 - 주무부처 담당자: 1명
- 2021년도 신규 공인 대상 28개 종목 중 서류심사 결과에 의해 현장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종목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흡'(1개 종목)으로 나타남.

5. 재공인 신청 대상 종목의 조사·연구

□ 조사·연구 개요

- 재공인 현장조사는 기존에 공인받은 종목 중 공인 유효기간이 2021. 5. 1. ~ 2022. 4. 30.에 만료되는 33개 종목(연장 승인 대상 1개 종목 제외)을 대상으로 최근 신규 공인 및 재공인 당시의 수준 유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연구를 실시함.
- 재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위원은 각 종목별 체제 전문가 및 주무부처 담당자 등 총 4~5명으로 구성함.
- 공인 적합 기준: 세부 평가 항목별 'F'가 없고, 항목별 평균 'D'(40%) 이하가 없으며, 환산 점수 총점이 70%(154점) 이상인 경우임(평가 점수 기준 보통 이상).

- 2022년 5월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 민간자격 34개 종목 중 연장 승인 대상 1개 종목을 제외한 33개 종목이 조사 대상임.

□ 조사·연구 결과

- 대상 종목: 33개 종목(24개 기관)
- 조사 기간: 2021. 6. 16.(수) ~ 7. 30.(금)
- 심사위원 위촉 현황
 - 원내: 12명(지원 3명 포함)
 - 원외: 42명
 - 자격 종목별 검정 체제 심사위원: 9명
 - 자격 종목별 내용 심사위원: 28명
 - 주무부처 담당자: 15명
- 2021년도 재공인 대상 현장조사를 실시한 33개 종목 중 32개 종목이 공인 유효기간 연장 추천의 결과를 받음.

6. 재공인 연장 승인 대상 종목의 조사·연구

- 「자격기본법」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 기간 등) 제2항에 의거해 주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정책심의회는 심의 없이 주무부 장관이 관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함.
- 연장 승인은 「자격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사·연구를 실시하지 않고, 교육·훈련기관, 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2개

기관 이상)하여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주무부 장관은 이를 참고하여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함.

- 2021년 연장 승인 대상 1건에 대해 교육·훈련계 및 산업계 5개 기관(단체)의 의견수렴 결과, 5개 기관(단체)에서 대상 종목에 대한 의견을 회신함.
- 관련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에 송부하였고, 이를 토대로 주무부처에서는 재공인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7. 변경 승인 및 완화 검정 심의

□ 변경 승인 심의

- 「자격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에 따라 공인자격 관리자는 공인받은 사항 중 자격의 검정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자격의 등급, 검정 기준, 검정 과목, 검정 방법, 응시 자격 및 유효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항 제5호에 따라 공인 사항의 변경 승인과 공인 이전 취득자 일부 면제 및 완화 검정에 대한 심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음.

□ 공인 이전 취득자 일부 면제 및 완화 검정 심의

- 「자격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인자격 관리자는 주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공인 이전 취득자에 대해 일부 면제 및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자격 검정을 실시할 수

있음.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항 제5호에 따라 공인 사항의 변경 승인과 공인 이전 취득자 일부 면제 및 완화 검토에 대한 심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음.

8. 정책 제언

첫째, 매년 공인 신청 참여와 공인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공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의 개편** 논의

둘째,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이해관계자(신청사, 주무부처, 평가자 등)의 사업 참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 기능 개선을 통한 민간자격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셋째,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자격 검정에서 비대면 검정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대면 검정 가이드라인** 마련

넷째, 공인 민간자격의 사후관리와 관련 자료의 대내외 요구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공인 신청서 및 평가 결과의 디지털화 관리**

다섯째,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격 관리·운영 능력 제고를 위한 **민간자격관리자 컨설팅 개선 방안** 마련

제1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배경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

제1장 |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배경

1. 연구 사업 추진 배경

- 산업 사회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자격 수요가 생기고 있음. 이에 1997년 자격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 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효율화하고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며,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격기본법」이 마련됨.
- 「자격기본법」이 제정될 당시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 당해 민간자격에 대해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자격의 활성화와 함께 그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
- 다만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일정한 기준과 범위 안에서

4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21)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¹⁾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민간자격 중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 대한 조사가 2000년부터 시작됨.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997년 3월 27일에 제정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법」(법률 제5315호)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설립 초기부터 목적 사업으로 자격 제도, 특히 국가기술자격 제도와 민간자격 제도의 국가공인 제도 도입 및 활성화 등의 연구와 함께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0년부터 자격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민간자격 공인 조사를 전담하고 수행하고 있음. 특히 민간자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공인 민간자격 제도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함.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인에 적합한 민간자격에 대해 매년 공정하게 세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민간자격 공인제도는 국민의 전반적인 직업능력 향상, 국가 차원에서 민간자격 제도 활성화 지원, 민간자격의 공신력 제고, 민간자격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 체제 도입 등을 유도하고 있음.
-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분야에서 질 높고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고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효용 가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자격 간의 보완 및 상호 경쟁을 통한 질 관리 등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1) 「자격기본법」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제3항: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위와 같은 법적 위상과 철학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자격 공인 조사·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
- 첫째, 민간자격 난립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발굴함.
 - 자격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이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민간자격의 발굴
 - 국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종목 발굴
 -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종목 발굴
 -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종목 발굴
 - 외화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 발굴
 - 특수 업종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종목 발굴
 - 일정 지역 또는 일정 산업에서 전수되는 기능이나 전통문화 예술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 발굴
- 둘째, 각종 전문직 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민간자격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민간자격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지나친 영리성을 배제함.
- 셋째, 국가자격 수준에 준하는 검정 기준, 방법, 절차 등의 적용을 통해 민간자격의 질 관리를 제고함.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

1. 「자격기본법」상 공인 조사의 주요 내용²⁾

- 정부는 산업구조 및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라 직업세계가 변화하는 현상에 대응하여 자격 제도가 일정 정도 국민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개편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격기본법」(1997. 3. 27., 법률 제5314호)과 「자격기본법 시행령」(1997. 8. 9., 대통령 제15453호)을 제정함.
- 「자격기본법」에서는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에 민간자격의 공인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조사 등), 제29조(공인 기간의 연장), 제30조(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 인정), 제31조(공인 사항의 변경),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항 등

- 이에 주무부 장관은 「자격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 신청에 따른 조사·연구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의 위임·위탁 규정³⁾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이를 위탁·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자격기본법」(법률 제11722호)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요약함.

3)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 「자격기본법」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위탁된 조사·연구 업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규 공인 신청 민간자격에 대한 공인 조사·연구
 - 재공인 신청 공인자격에 대한 재공인 현장조사
 - 연장 승인 신청 공인자격에 대한 유관 기관 의견수렴
 - 변경 승인 신청 공인자격에 대한 적합 여부 심의 및 승인
 -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 일부 면제 및 완화 검정 시행에 대한 적합 여부 심의 및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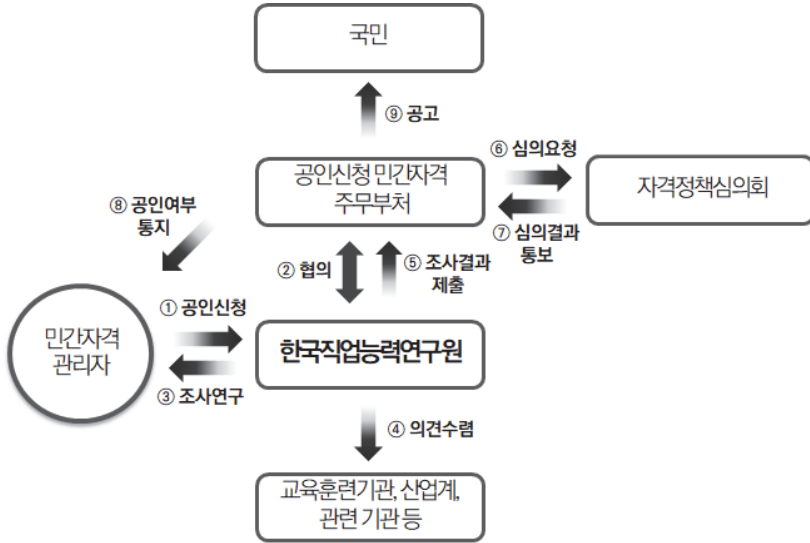
2. 본 과제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체계

- 동 사업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위해 제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연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사업의 운영 구조 및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 조사·연구 업무 수행

- 신규 공인 및 재공인 대상 운영 구조는 [그림 1-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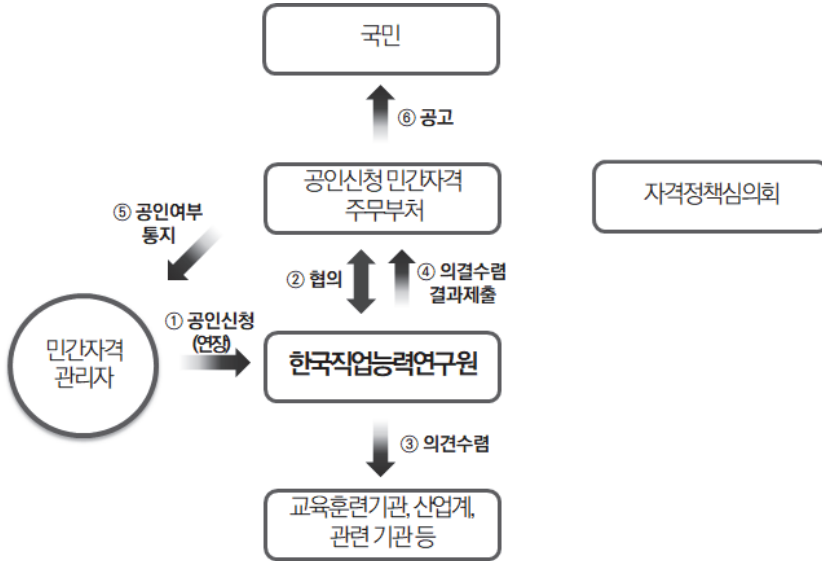
[그림 1-1] 민간자격 공인(신규 공인, 재공인 대상) 제도의 운영 구조



- ① 공인 신청: 공인 공고에 따른 신청 및 접수
- ② 협의: 공인 신청 자격에 대한 주무부처와의 협의
- ③ 조사·연구: 공인 신청 자격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④ 의견수렴: 공인 신청 자격에 대한 교육·훈련계(직업교육·훈련기관 등), 산업계,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
- ⑤ 조사 결과 제출: 주무부처에 조사 결과 제출
- ⑥, ⑦ 심의: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요청 및 심의 결과 통보(주무부처)
- ⑧, ⑨ 공인: 주무부처의 공인 여부 통지 및 공고

- 연장 승인 대상 운영 구조는 [그림 1-2]와 같음.

[그림 1-2] 민간자격 공인(연장 대상) 제도의 운영 구조



- ① 공인 신청(연장 승인): 공인 공고에 따른 신청 및 접수
- ② 협의: 공인 신청 자격에 대한 주무부처와의 협의
- ③ 의견수렴: 공인 신청 자격의 연장승인에 대한 교육·훈련계(직업교육·훈련기관 등), 산업계,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
- ④ 의견수렴 결과 제출: 주무부처에 조사 결과 제출
- ⑤, ⑥ 공인: 주무부처의 공인(연장 승인⁴⁾) 여부 통지 및 공고(자격 정책심의회 생략)

4) 「자격기본법」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 기간 등) 제2항에 의거해 주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 기간을 1회에 한해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음.

10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21)

◦ 주요 추진 절차

-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등 조사 체계 계획 수립
-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 공고(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 및 접수
- 공인 신청 접수 종목에 대한 신청 자격 및 법적 요건 검토(심사 전)
- 신규 공인 신청 종목 조사(서류심사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현장조사 실시)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공인 신청 종목 조사(현장조사 실시)
- 공인 신청 자격에 대한 교육·훈련계(직업교육·훈련기관 등), 산업계,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
- 심사 결과 정리 및 민간자격 국가공인 대상 종목 추천
-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 결과 주무부처 송부
- 변경 승인 신청 공인자격,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 일부 면제 및 완화 검토 시행에 대한 적합 여부 심의 및 승인
- 21년간의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결과 분석
- 결과 분석을 통한 차기 연도 사업 추진 계획 절차 수립 및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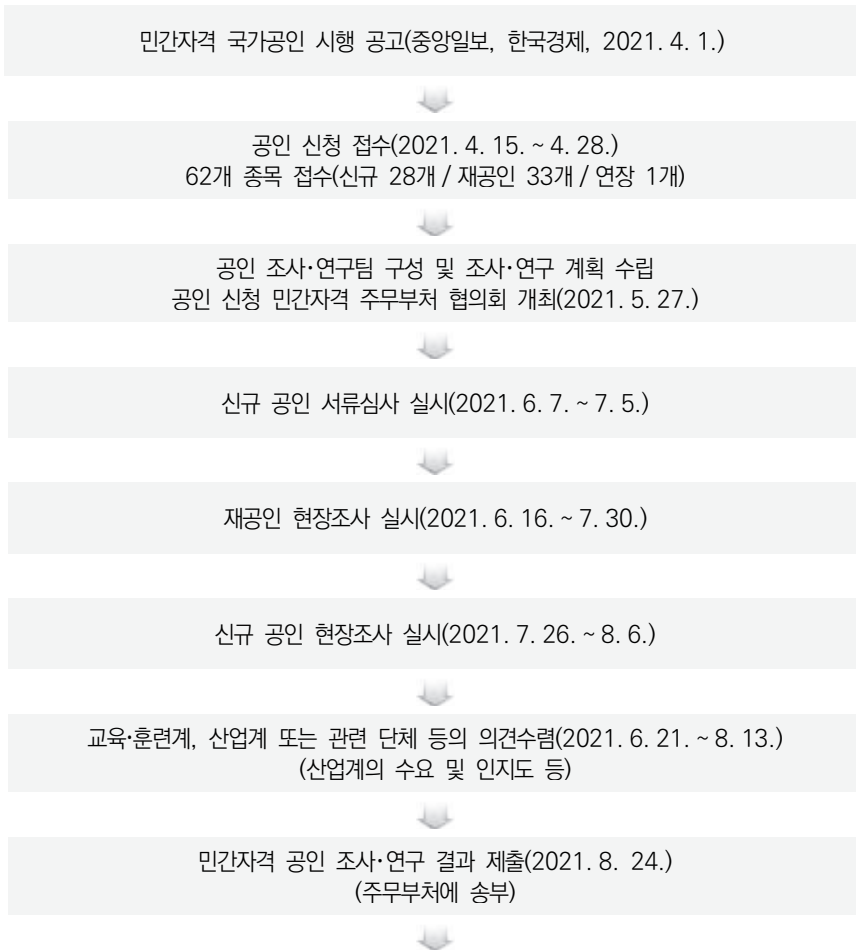
나. 공인자격을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검토

- 공인 사업 추진 관련 정책 제언 및 향후 개선 방안 협의
 - 공인제도 관련 정책 제언
 - 공인 사업 추진 절차 및 결과 분석을 통한 향후 개선 방안 협의

3. 금년도 조사·연구 추진 절차

가. 신규 공인 및 재공인 신청 대상(연장 승인 제외)

[그림 1-3]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절차



12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21)



- 민간자격 공인 신청 접수에 관한 고시
 - 민간자격 공인 시행 공고(중앙일보, 한국경제, 2021. 4. 1.)
 - 서류 신청 및 접수 진행
 - 서류 접수 기간: 2021. 4. 15. ~ 4. 28.
 - 신청 현황: 62개 종목(신규 공인 28개, 재공인 33건, 연장 승인 1개)
 - 접수 현황: 62개 종목(신규 공인 28개, 재공인 33건, 연장 승인 1개)
- 소관부처 부처협의회 개최
 - 일 시: 2021. 5. 27. (목) 15:00 ~
 - 장 소: 화상회의
 - 내 용: 2021년도 민간자격 공인사업 운영 안내 및 소관부처(서) 선정
 - 참석기관: 교육부 외 9개 부처·청·위원회
 - 결 과: 소관부처 확정 및 향후 추진방향 확정
- 공인 조사·연구팀 구성 및 계획 수립
 - 계획 수립: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조사·연구 평가 기준을 수립

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계,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마련

- 체제 전문가, 재정 전문가(신규 공인 종목에 한함), 내용 전문가, 주무부처 담당자로 구성(신규 공인 5~6명 내외, 재공인 4~5명 내외)

◦ 조사·연구 실시

- 신규 공인 종목 심사

- 서류심사: 신청 접수된 28개 종목에 대한 서류심사 실시(2021. 6. 7. ~ 7. 5.)
- 현장조사: 서류심사 이후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한 1개 종목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2021. 7. 26. ~ 8. 6.)

- 재공인 종목 심사⁵⁾

- 현장조사: 33개 종목 실시(2021. 6. 16. ~ 7. 30.)

◦ 민간자격 공인 조사·연구 결과 제출

- 주무부처에 공인 신청 자격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제출(2021. 8. 24.)

◦ 자격정책심의회 심의(10월 중)

- 심의회 심의 후 주무부처에 결과 통보(10월 중)

◦ 공인 신청 결과 통지(10~11월 중)

- 주무부처에서 공인 신청 결과를 신청인에 통지(10~11월 중)

5) 2021년 5월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 민간자격 23건 중 연장 승인 대상 2건을 제외한 21건이 조사 대상임.

14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21)

나. 최초 공인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승인 조사·연구⁶⁾

◦ 조사 대상

- 2022년 5월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 민간자격 34개 종목 중 최초 공인 기간이 만료되는 연장 승인 대상⁷⁾ 1개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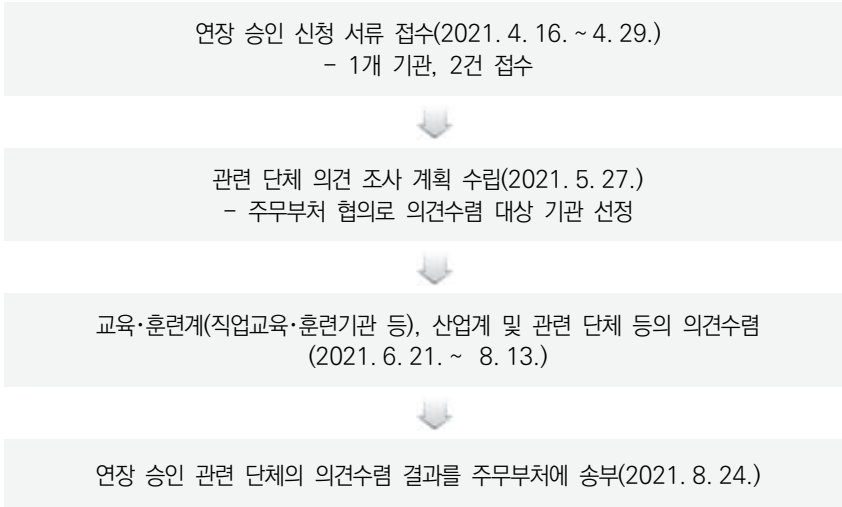
◦ 방법 및 절차([그림 1-4] 참조)

- 연장 승인 대상은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주무부처에 제출하도록 함.
- 연장 승인 대상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조사 항목
 - 해당 자격에 대한 관련 직종 및 산업계에서의 필요성
 - 향후 관련 직종 및 산업계에서의 수요
 - 공인 기간 연장의 필요성
 - 민간자격 관리기관의 대내외 인지도

6) 「자격기본법」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 기간 등) 제4항.

7) 「자격기본법」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 기간 등) 제2항에 의거해 주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 기간을 1회에 한해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음.

[그림 1-4] 연장 승인 조사 절차 및 경과



다. 변경 승인 및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 완화 검정 승인 심의([그림 1-5] 참조)

□ 변경 승인 심의

- 「자격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에 따라 공인자격 관리자는 공인받은 사항 중 자격의 검정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인받은 민간자격 중 3개 종목(2개 기관)이 검정 과목 및 검정 방법에 대해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동 조사를 위해 주무부처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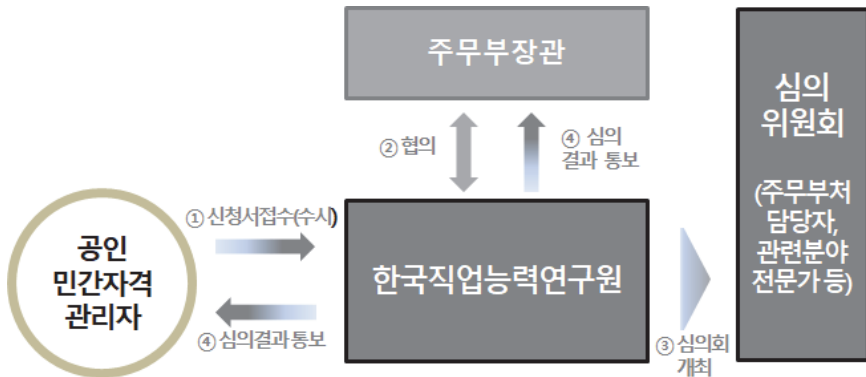
8) 자격의 등급, 검정 기준, 검정 방법, 검정 과목, 응시 자격 및 유효기간, 교육훈련 과정의 과목명, 이수 기간 및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등.

16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21)

자와 해당 종목 전문가 및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연구진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함.

- 변경 승인 조사·연구의 방법 및 절차
 - 심의위원회 체제로 구성하여 변경 승인 신청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고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함.
 - 변경 승인 신청 서류상 신청 내용 및 사유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 시 신청인을 배석하도록 하여 해당 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함.
 - 최종 심의 결과 변경 승인 신청 자격에 대해 ‘적합 / 부적합 / 조건부 적합 / 변경 승인 대상 아님’ 등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주무부처에 변경 승인 결과를 제출함.

[그림 1-5] 변경 및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원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 심의 절차



□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 심의

- 「자격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인자격 관리자는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인 이전 취득자에 대한 일부 면제 및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자격 검정을 실시할 수 있음.
-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 조사·연구의 방법 및 절차
 - 승인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되, 서류심사 내용 중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나 서류심사로 평가가 불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함.
 - 심사 결과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완화 검정 시행 계획이 승인 적합 또는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인별 심사 결과표에 ‘승인 적합’ 또는 ‘승인 부적합’으로 표시함.
 -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에 따른 별도의 부대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별 심사 결과표에 ‘조건부 적합’으로 표시하고, 해당 조건 및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함.
 - 공인받은 민간자격 중 2개 종목(2개 기관)이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동 조사를 위해 주무부처 담당자와 해당 종목 전문가 및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연구진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함.

4. 민간자격 공인제도의 운영 주체별 역할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민간자격 공인제도의 홍보
 - 민간자격 공인 신청에 관한 고시
 - 민간자격 관리자가 제출한 신청 서류 접수 및 법적 요건 심사
 - 종목별 해당 주무부처와의 협의
 - 신청 종목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교육·훈련계(직업교육·훈련기관 등), 산업계,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
 - 조사·연구 후 주무부처에 결과 송부
 - 민간자격 공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연구 체제 및 행정 지원 체제 구축
 - 민간자격 개발·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
 -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 접수 및 안내
- 주무부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한 공인제도 업무 수행
 - 주무부 장관의 민간자격 공인 여부 결정
 - 자격 신청인에게 공인 결과 통지 및 관보(홈페이지) 게재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공인 결과 통보
 - 주무부 장관의 공인 증서 교부
 -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의 해당 종목 관리·운영에 대한 확인·점검
 - 공인 취소 또는 자격 검정의 정지 등 사후관리

제2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경과 및 조사 결과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경과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조사 결과

제3절 재공인 조사·연구 결과

제4절 공인 이전 취득자 완화 검정 및 변경
승인 조사·연구 결과

제2장 |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경과 및 조사 결과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경과⁹⁾

1. 신청 및 접수 대상

- 공인 신청 대상은 법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주무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1년 이상, 3회 이상 자격 검정 실적’이 있는 민간자격(법인 등기부 등본¹⁰⁾을 통해 확인함)으로 함.
- 공인의 주 대상은 자격 종목 및 등급으로 함.
 - 공인 신청 시 공인 신청 종목과 등급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해당 종목을 공인받았더라도 신규 등급 추가 시 해당 등급에 대해 재차 공인 신청을 해야 함.

9)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5조(민간자격의 공인 절차) 제1항,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10) 「민법」 제33조(법인 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2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21)

- 민간자격 관리자는 자격 발급의 주관 기관을 의미하며, 단순히 자격 검정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은 공인 신청이 불가함.
- 자격 종목의 발급 기관이란 자격증에 직인과 함께 명시된 기관을 의미함.
- 공인 신청 기관은 단순히 자격 취득을 위한 학습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 검정 체계와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
- 법적 요건 중 '1년 이상, 3회 이상 자격 검정 실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신청일 현재 등록 이후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 이상의 자격 검정 실적(발급 실적)'에 관한 산정 기준
 - 1년 이상 시행: 최초 자격 검정 시행 공고 일자를 기준으로 공인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이 되어야 함.
 - 3회 이상의 자격 검정 실적: 공인 신청 전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발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3회 이상 자격 검정을 실시하여야 함.
 - ② 최근 1년간 자격 종목의 중도 변경 시 공인 신청 가능 여부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2(등록 사항의 변경)에 따라 등록 사항을 변경한 이후 신청일 현재 1회 이상의 검정 실적이 있어야 하며, 검정 실적이 없으면 공인 신청 요건이 미비한 것으로 간주함.
 - 등록 사항 변경의 경우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가능으로 통지된 이후 시행 가능함.
 - 단 자격 종목 및 명칭, 검정 과목, 검정 방법 등이 전반적으로 바뀌어 새로운 자격 종목으로 판단되는 경우 변경 이후 1년 이상 시

행되고 3회 이상의 검정 실적을 갖춘 이후 공인 신청하여야 함.

- ③ ①번 사항은 충족되나 자격 종목 발급 기관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이후 현재 1회 이상의 검정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실적이 없을 경우 공인 신청 요건이 미비한 것으로 간주함.

※ 1회 검정 실적 기준은 자격 검정 시행 공고부터 자격 검정 실시 및 자격증 발급까지 종료된 경우를 말함.

- 다만 자격 종목 발급 기관 변경 시에는 자격 관련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단일 기관에서 발급하던 자격증을 1개 기관 이상과 연합하여 발급한 경우 이전의 검정 실적은 인정하되, 변경 이후 1회 이상의 검정 실적이 필요함.

2. 2021년도 공인 신청 및 접수 절차

- 민간자격 공인 신청 및 접수를 위해 『중앙일보』 및 『한국경제』에 ‘민간자격 공인 시행 공고(2021. 4. 1.)’를 게재함.
- 또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인 시행 공고문 및 신청 편람을 탑재하고, 신청 및 신청서 작성 요령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함.
- 이 밖에 재공인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재공인 신청이 필요한 공인자격 관리자에게 공인 신청 안내를 별도로 진행함.
- 민간자격 공인 신청에 따른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24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21)

- 첫째,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각호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에 의거해 공인 신청 민간자격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함.
 - 이를 통해 민간자격 등록 여부 및 법인 여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3회 이상 실시 여부를 확인함.
- 둘째, 「자격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각호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공인 신청서 서류 제출 여부를 조사함.
 -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공인 신청일 이전 1년간의 민간자격 검정 실적 및 수지 결산서 등 사업 관련 실적, 공인 신청 이후 3년간의 연도별 사업 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검정 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 목록 및 재산의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 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해당 민간자격의 활용 정도와 같은 법적 필수 서류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함.
- 이 밖에 공인 신청 민간자격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공인 기준에 적합한 종목인지 조사하기 위해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체제(자격 설계 분야),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체제(검정 분야),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격 관리·운영 능력과 관련한 평가 자료를 제출받음.

3. 2021년도 공인 신청 및 접수 결과

- 2021년도 공인 신청 및 접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2-1〉)

참조).

- 신청 및 접수 기간: 2021. 4. 15.(목) ~ 4. 28.(수)
- 신청 종목 및 기관: 62개 종목, 50개 기관
- 접수 종목 및 기관: 62개 종목, 50개 기관

〈표 2-1〉 2021년 공인 민간자격 신청 및 접수 현황

(단위: 건, 개)

구분	신청 건수	접수 건수	접수 기관 수
신규 공인	28	28	26
재공인 ¹¹⁾	33	33	23
연장 승인 ¹²⁾	1	1	1
계	62	62	50*

* 신규, 재공인, 연장 승인을 각각 신청한 기관이 중복 계산된 수치임.

* 전체 접수된 62건 중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대상은 신규·재공인 신청이 61건이며, 연장 승인 대상 1건은 추후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없이 주무부처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접수된 공인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을 토대로 주무부처를 분류하며, 그 과정은 [그림 2-1]과 같음.
- 주무부처 선정 기준
 - ① 등록 소관부처로 주무부 장관 선정(유사 등록 자격이 있을 경우 포함)
 - ② 기존 공인 심사 관련 통지 부처로 주무부 장관 선정
 - ③ 현행 국가(기술)자격의 범위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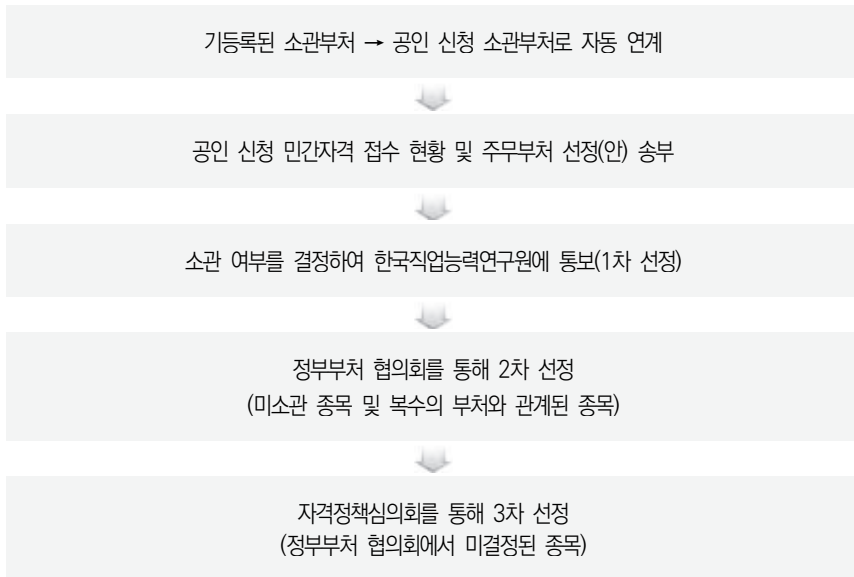
11) 2022년 5월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 민간자격 35건의 공인 종목 중 연장 승인 대상 1건, 공인신청 포기 종목 1건을 제외한 수치임.

12) 「자격기본법」상 자격정책심의회 심의·상정하는 재공인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연장 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26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21)

- ④ 「정부조직법」상 업무 분장 사항
 - ⑤ 이상과 같은 사항에 의해서 해당 자격의 관계 부처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경우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함.
- ※ 「자격기본법」 개정(2013. 4. 5.)에 따라 2015년부터 등록 단계부터 주무부처가 결정되고 있으며, 등록 소관부처를 공인 신청 소관부처로 자동 연계함.

[그림 2-1] 공인 신청 민간자격 주무부처 선정 과정



- 금년도의 경우 정부부처 협의회를 통해 모든 종목의 소관부처를 확정 하였으며, 최종 신청 접수된 현황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표 2-2>와 같음.

〈표 2-2〉 2021년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민간자격 현황

(단위: 건)

부 처 명	신규 공인	재공인	연장 승인	합 계
고용노동부	1	1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4	-	8
관세청	-	1	-	1
교육부	3	14	-	17
국토교통부	1	1	-	2
금융위원회	3	-	1	4
기획재정부	-	4	-	4
농림축산식품부	3	-	-	3
문화체육관광부	1	2	-	3
보건복지부	6	2	-	8
산업통상자원부	2	3	-	5
식품의약품안전처	1	-	-	1
중소벤처기업부	1	-	-	1
행정안전부	2	1	-	3
총 14개 부·처·청·위원회	28	33	1	62

4. 2021년도 공인 신청 및 접수 결과의 주요 특성 분석

가. 신규 공인 신청 종목

1) 재신청 현황

- 2021년도 신규 공인 신청에 따른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과거 조사 결과 공인 부적합 대상이던 종목 중의 다수가 재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 현 「자격기본법」에는 공인 탈락 시 일정 기간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신규 공인 신청 28개 종목 중 7개 종목(25.0%)은 최초 신청, 20개 종목(71.4%) 공인 신청 경험이 있으며, 이 중 15개

종목(53.6%)은 2020년에도 공인 신청을 하였음.

2) 기관 현황

- 신청 대상 기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공인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공인 민간자격 관리 기관에서 다수 신청한 것으로 확인됨.
 - 즉 과거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운영 중인 기관이 반복적으로 새로운 자격 종목을 개발하여 공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인 민간자격 관리기관(4개)에서 5개 종목(17.9%)을 신규 공인 신청함.

나. 재공인(연장 승인 포함) 신청 현황

- 2022년 5월 이래로 공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목 35개 중 34개 종목(97.1%)이 신청하였으나, 1개 종목은 자격 응시자 수 감소 등의 이유로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음.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조사 결과

1. 조사·연구 위원 구성 및 조사·연구 방법

가. 조사·연구 위원 구성

- 신규 공인 조사·연구팀은 자격 종목별 체제 전문가, 재정 전문가, 내용 전문가 및 주무부처 담당자 등 5~6명 내외로 구성함.
- 원내 전문가의 경우 전공, 관심 분야, 과거 심사 이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 종목을 선정함.
- 자격 종목별 내용 전문가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주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인사 중 공인 신청 민간자격 관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선정함.
- 다만 주무부처의 내용 전문가 추천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적합한 인사를 선정함.
- 내부 전문가(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원, 주무부처 담당자)를 제외한 외부 전문가를 조사·연구 위원으로 선정할 때는 해당 신청자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를 위촉·선정하되, 공인 신청 민간자격 관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음.

나. 조사·연구 방법

- 신규 공인 신청 종목에 대한 조사·연구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함.¹³⁾
 - 다만 서류심사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종목에 한해 현장조사를 실시함.
- 공인 신청 민간자격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공인 기준에 적합한 종목인지 조사함(「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및 제3호 근거).
 - 첫째, 자격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자격 관리·운영 체제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함.
 - 둘째, 자격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검정 관리·운영 체제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함.
 - 셋째, 자격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 관리·운영의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함.
- 신규 공인 조사·연구의 기준은 <표 2-3>과 같음.

13)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6조(조사 등) 제2항.

〈표 2-3〉 신규 공인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기준

분야	영역	항목	조사 방법		세부 평가 내용	관련 법령	
			서류 심사	현장 조사			
2. 공인 기준 충족여부	2.1. 민간자격 관리·운영 체제 (자격 분야)	2.1.1. 자격의 필요성	○	○	2.1.1.1. 운영 목적	「자격기본법」 제3조,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제3호	
					2.1.1.2. 자격의 활용도		
		2.1.2. 자격 체제의 적합성	○	○	2.1.2.1. 검정 기준		
					2.1.2.2. 검정 방법		
					2.1.2.3. 검정 과목		
					2.1.2.4. 응시 자격		
		2.2. 민간자격 관리·운영 체제 (검정 분야)	2.2.1. 출제 및 채점 절차의 적합성	○	○		2.2.1.1. 출제기준
							2.2.1.2. 문제의 적절성
	2.2.1.3. 출제 절차 및 보안						
	2.2.1.4. 채점 기준 및 절차						
	2.2.1.5. 채점 관리						
	2.2.2. 검정 시행의 적합성		○	○	2.2.2.1. 검정 계획 및 실행 절차		
					2.2.2.2. 시험감독		
					2.2.2.3. 시험 문제 보안		
	2.3.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격 관리·운영 능력 (기관 분야)	2.3.1. 조직 관리 및 운영 능력	○	○	2.3.1.1. 관리·운영 조직		
					2.3.1.2. 인력		
					2.3.1.3. 시설·장비		
2.3.1.4. 재정							
2.3.1.5. 발전 계획							
2.3.1.6. 자격 발급 및 등록							
2.3.1.7. 사후 관리 및 문서 보관							

다. 공인 적합 대상 종목 선정 기준

- 2000년부터 신청 민간자격별 주무부처와 공인 추천 기준을 협의하여 공인 적합 대상을 선정해 왔음. 특히 공인 조사·연구 결과(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총배점(220점)의 70%(154점) 이상, 하위 영역별 배점의 40%(88점) 이상을 얻은 민간자격 종목 중 주무부처에서 공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종목에 한해 공인 추천 대상 종목으로 심의·상정함.
- 2021년에도 주무부처 담당자 협의회(2021. 5. 27.)를 통해 본원의 공인 추천 기준인 총배점의 70%(154점) 이상을 얻은 대상을 공인 적합 대상 종목으로 선정하기로 함(〈표 2-4〉 참조). 이에 2021년도 조사·연구 결과 중 세부 평가 항목별 'F'가 없고, 항목별 평균 'D'(40%) 이하가 없으며, 환산 점수 총점이 70%(154점) 이상인 종목을 공인 적합 대상 종목으로 선정하고 결과를 주무부처에 송부함.

〈표 2-4〉 공인 적합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평가 등급	점수(220점 만점)	선정 기준
우수(80% 이상)	176점 이상	국가공인 추천
보통(70% 이상 80% 미만)	154점 이상 ~ 176점 미만	
미흡(60% 이상 70% 미만)	132점 이상 ~ 154점 미만	국가공인 추천하지 않음
매우 미흡(60% 미만)	132점 미만	

- 다만 위의 조사·연구 기준에서 환산 점수 총점이 154점(70%) 이상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우수한 등급으로 평가할 수 없도록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발견될 경우
 - 출제 과정상에 문제 유출 사례가 있거나, 허위로 출제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경우
 - 채점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검정 시행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경우
 - 시험 문제의 인쇄, 운송, 보관 과정에서 문제의 유출이 있는 경우
 - 부정하게 자격을 발급한 사례가 있는 경우
 -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 기타 검정 시행 과정에서 허위로 조작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이 발견된 경우
 - 자격 관리·운영 규정에 명시된 서류 보관 및 폐기 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신규 공인 서류심사 실시 결과

- 대상 종목: 28개 종목, 26개 기관
- 심사 기간: 2021. 6. 7.(월) ~ 7. 5.(월)
- 심사위원 위촉 현황
 - 원내: 12명(각 팀 책임 9명, 지원 3명 포함)
 - 원외: 86명(체제 전문가 12명, 재정 전문가 1명, 내용 전문가 52명, 주무부처 담당자 21명)
- 서류심사 조사 기준
 - 2021년도 민간자격 공인 조사·연구 기준
- 2021년도 신규 공인 신청 대상 종목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
 - 현장조사 대상 1개 종목(1개 기관) 선정

3. 신규 공인 현장조사 실시 결과

- 조사 대상: 1개 종목, 1개 기관
- 조사기간: 2021. 8. 2.(월)
- 현장조사 위원 위촉 현황
 - 원내: 1명(각 팀 책임 1명)
 - 원외: 5명(체제 전문가 2명, 내용 전문가 2명, 주무부처 담당자 1명)

- 현장조사 기준
 - 2021년도 민간자격 공인 조사·연구 기준
- 주무부처별 현장조사 대상 종목
 - 금융위원회 소관 1개 종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표 2-5〉 참조).

〈표 2-5〉 주무부처별 현장조사 대상 종목 현황(신규 공인)

(단위: 건)

소관부처	신규 공인 신청	현장조사 대상
고용노동부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
교육부	3	-
국토교통부	1	-
금융위원회	3	1
농림축산식품부	3	-
문화체육관광부	1	-
보건복지부	6	-
산업통상자원부	2	-
식품의약품안전처	1	-
중소벤처기업부	1	-
행정안전부	2	-

- 2021년도 신규 공인 대상 28개 종목 중 서류심사 결과에 의해 현장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종목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흡’(1개 종목)으로 나타남.

4. 교육·훈련기관,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실시 결과

- 근 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6조(조사 등) 제4항
- 의견수렴 단체의 선정 기준
 - 신청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교육·훈련기관 및 관련 단체 중 1개 기관 이상을 선정하여 의견수렴을 요청함.
- 의견수렴 내용
 - 산업계 측면에서 자격의 필요성 및 수요, 신청 기관의 인지도, 국가 공인의 필요성 등
- 의견수렴 결과
 - 신규 공인 신청 현장조사 대상 1개 종목에 대해 3개 기관 중 3개 기관이 회신함.

제3절 재공인 조사·연구 결과

1. 조사·연구 위원 구성 및 조사·연구 방법

가. 조사·연구 위원 구성

- 재공인 조사·연구 팀은 자격 종목별 체제 전문가, 내용 전문가 및 주 무부처 담당자 등 4~5명 내외로 구성함.

- 자격 종목별 내용 전문가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주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인사 중 공인 신청 민간자격 관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선정함.
- 다만 주무부처의 내용 전문가 추천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적합한 인사를 선정함.
- 내부 전문가(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원, 주무부처 담당자)를 제외한 외부 전문가를 조사·연구 위원으로 선정할 때는 해당 신청 자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를 위촉·선정하되, 공인 신청 민간자격 관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함.

나. 조사·연구 방법

- 재공인 신청 종목에 대한 조사·연구는 기공인된 종목의 조사·연구로서,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서류심사를 제외한 현장조사 후 평가를 반영함.¹⁴⁾
- 재공인 조사·연구 역시 신규 공인 조사·연구와 동일하게 공인 신청 민간자격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공인 기준에 적합한 종목인지 조사함(「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및 제3호 근거).
 - 첫째, 자격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자격 관리·운영 체제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함.
 - 둘째, 자격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검정 관리·운영 체제

14)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6조(조사 등) 제2항.

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함.

- 셋째, 자격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 관리·운영의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함.

○ 재공인 조사·연구의 기준은 <표 2-6>과 같음.

- 재공인 현장조사는 공인 연도(2000~2021년)의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에 대해 공인 이후의 변경 사항을 점검하고, 아울러 공인 당시의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함.

<표 2-6> 재공인 조사·연구 기준

영역	항목	세부 평가 항목	관련 법령
2.1. 민간자격 관리·운영 체제 (자격 분야)	2.1.1. 자격의 필요성	2.1.1.1. 자격의 활용도	「자격기본법」 제3조,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제3호, 제26조
	2.1.2. 자격 체제의 적합성	2.1.2.1. 공인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에 대한 평가	
2.2. 민간자격 관리·운영 체제 (검정 분야)	2.2.1. 출제 및 채점 절차의 적합성	2.2.1.1. 출제 위원(검토 위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	
		2.2.1.2. 출제 시 보안	
		2.2.1.3. 출제 절차 및 문제의 적절성	
		2.2.1.4. 출제 관련 문서 및 서류	
		2.2.1.5. 시험 문제 인쇄 방법 및 절차	
		2.2.1.6. 시험 문제 운송 방법의 적절성	
		2.2.1.7. 채점 위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	
		2.2.1.8. 채점 절차	
		2.2.1.9. 채점 결과 및 답안지 보관	

영역	항목	세부 평가 항목	관련 법령
	2.2.2. 검정 시행의 적합성	2.2.2.1. 응시자 자격(일반, 면제 등)	
		2.2.2.2. 수험 원서와 연명부 관리 현황 및 일치 여부	
		2.2.2.3. 검정 시행	
		2.2.2.4. 검정 결과 보고	
		2.2.2.5. 시험 감독 위원의 공정성 및 적절성	
		2.2.2.6. 시험 감독 위원의 배치	
		2.2.2.7. 시험 관리·감독 규정	
		2.2.2.8. 시험장의 적절성	
		2.2.2.9. 시험 문제 보안	
		2.2.2.10. 검정료	
2.3.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격 관리·운영 능력 (기관 분야)	2.3.1. 조직 관리 및 운영 능력	2.3.1.1. 인력 및 조직	
		2.3.1.2. 시설 및 장비	
		2.3.1.3. 재정	
		2.3.1.4. 사후 관리 (자격 발급 및 등록, 자격의 유효기간 등)	
		2.3.1.5. 민원 처리 업무	
		2.3.1.6. 합격 기준	
		2.3.1.7. 기타 사항	

다. 공인 연장 추천 대상 종목 선정 기준

- 공인 연장 추천 대상 종목 선정 기준은 신규 공인 조사·연구와 동일하게 적용함[154점(70%) 이상](〈표 2-7〉 참조).

〈표 2-7〉 공인 연장 추천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평가기준	점수(220점 만점)	선정 기준
최근 공인 및 재공인 당시 수준 유지 여부(27개 항목)	154점 이상	유효기간 연장 추천
	154점 미만	유효기간 연장 추천하지 않음

- 다만 재공인 조사·연구의 경우 변경 승인 대상 항목에 ‘부적합’이 있거나, 조사·연구 결과에서 세부 평가 항목별 ‘F’로 판정된 영역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유효기간 연장 추천을 하지 않으며, 특히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함.
- 신규 공인 조사·연구와 마찬가지로 위의 조사·연구 기준에서 환산 점수 총점이 154점(70%) 이상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우수한 등급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 출제 과정상에 문제 유출 사례가 있거나, 허위로 출제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경우
 - 채점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검정 시행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경우
 - 시험 문제의 인쇄, 운송, 보관 과정에서 문제의 유출이 있는 경우
 - 부정하게 자격을 발급한 사례가 있는 경우

-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 기타 검정 시행 과정에서 허위로 조작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이 발견된 경우
- 자격 관리·운영 규정에 명시된 서류 보관 및 폐기 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재공인 조사 대상

- 2022년 5월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 민간자격 35개 종목 중 연장 승인 대상 1개 종목, 재공인 신청 포기 1개 종목을 제외한 33개 종목이 조사 대상임.
- 이에 2021년도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공인 현장조사는 33개 종목에 대해 실시함.

3. 재공인 현장조사 실시 결과

- 대상 종목: 33개 종목(23개 기관)
- 조사 기간: 2021. 6. 16.(수)~ 7. 30.(금)
- 심사위원 위촉 현황
 - 원내: 12명(지원 3명 포함)
 - 원외: 86명(체제 전문가 9명, 내용 전문가 52명, 주무부처 담당자

15명)

- 2021년 공인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공인 현장조사를 실시한 종목은 총 33개 종목임.
- 2021년도 재공인 대상 33개 종목 가운데 32개 종목에 대해 공인 유효기간 연장 추천의 결과가 나타남.

4. 교육·훈련기관, 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결과

- 교육·훈련기관, 산업계, 자격 종목 관련 단체 의견수렴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6조(조사 등) 제4항에 의거해 교육·훈련기관, 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함.
- 의견수렴 단체의 선정 기준
 - 신청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교육·훈련기관, 산업계 및 관련 단체 중 2개 기관 이상을 선정함.
- 교육·훈련기관, 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 의견수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민간자격 종목에 대한 관련 직종 및 산업계에서의 자격 필요성 파악
 - 민간자격 종목에 대한 관련 직종 및 산업계에서의 자격 수요 파악
 - 민간자격 관리 기관에 대한 관련 직종 및 산업계에서의 인지도 파악
 - 공인 민간자격의 연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

- 의견수렴 결과
 - 재공인 종목에 대해 63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63개 기관이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의견수렴 결과를 해당 주무부처에 송부함.

5. 연장 승인 종목에 대한 관련 단체 의견수렴

- 「자격기본법」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 기간 등) 제2항에 의거해 주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정책심의회는 심의는 생략할 수 있음.
 -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하지 않음.
- 대상 종목: 1개 종목(1개 기관)
- 조사 기간: 2021. 6. 21.(월) ~ 8. 13.(금)
- 연장 승인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 연장 승인은 「자격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사·연구를 실시하지 않고, 교육·훈련기관, 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2개 기관 이상)하여 주무부처에 제출함.
 - 주무부 장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참고하여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의견수렴 대상 기관은 주무부처에서 추천한 기관으로 선정하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중에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1차

44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21)

선정한 후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최종 선정함.

- 교육·훈련기관, 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 의견수렴의 주요 내용
 - 민간자격 종목에 대한 관련 직종 및 산업계에서의 자격 필요성 파악
 - 민간자격 종목에 대한 관련 직종 및 산업계에서의 자격 수요 파악
 - 민간자격 관리 기관에 대한 관련 직종 및 산업계에서의 인지도 파악
 - 공인 민간자격의 연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
- 2021년 연장 승인 대상 1건에 대해 교육·훈련 및 산업계 5개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5개 기관(단체)에서 대상 종목에 대한 의견을 회신함.

제4절 공인 이전 취득자 원화 검정 및 변경 승인 조사·연구 결과

1. 변경 승인 심의

가. 변경 승인 심의 절차

- 「자격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에 따라 공인자격 관리자는 주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공인받은 자격의 등급, 검정 기준, 검정 과목, 검정 방법, 응시 자격 및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자격 검정을 실시할 수 있음.
- 공인받은 민간자격 중 2개 종목(2개 기관)이 검정 기준, 검정 과목, 검정 방법, 유효기간 등에 대해 변경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동 조사를 위해 해당 자격의 주무부처 담당자와 자격 종목별 체제 전문가 및 내용 전문가를 위촉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함.

나. 변경 승인 심의 결과

- 변경 승인 적합 여부 심의 결과 2개 종목의 변경 내용에 대해 1개 종목은 '적합', 1개 종목은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주무부처 및 신청 기관에 해당 결과를 통지함.

2.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일부 면제 및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 심의

- 「자격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인자격 관리자는 주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공인 이전 취득자에 대해 일부 면제 및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자격 검정을 실시할 수 있음.
- 공인 민간자격 중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일부 면제 및 완화 검정은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연중 수시로 접수하였으며, 2021년도¹⁵⁾에는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으로 일부 면제 및 완화 검정을 신청한 기관은 없음.

15) 보행지도사(공인 기간 2021. 5. 1. ~ 2023. 4. 20.) 완화 검정 신청서 작성 중.

제3장

22년간 사업 추진 결과 분석

제1절 22년간(2000~2021년) 공인 신청 현황

제2절 22년간(2000~2021년) 공인 조사 결과

제3절 소관부처 및 기관별 현황

제4절 2021년도 공인 신청 민간자격의 주요
특징 분석

제5절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

제3장 | 22년간 사업 추진 결과 분석

제1절 22년간(2000~2021년) 공인 신청 현황

1. 연도별 공인 신청 현황

- 제1차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을 시행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인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0년도에 217개 종목이 신청되었으며, 2001년도에 114개 종목, 2002년도에 108개 종목, 2003년도에 112개 종목, 2004년도에 73개 종목, 2005년도에 119개 종목, 2006년도에 102개 종목, 2007년도에 84개 종목, 2008년도에 84개 종목, 2009년도에 68개 종목, 2010년도에 86개 종목, 2011년도에 96개 종목, 2012년도에 77개 종목, 2013년도에 96개 종목, 2014년도에 100개 종목, 2015년도에 80개 종목, 2016년도에 70개 종목, 2017년도에 71개 종목, 2018년도에 75개 종목, 2019년도에 80개 종목, 2020년도에 51개 종목, 2021년도에는 62개 종목이 공인 신청함.
 - 이 중 공인을 받은 자격 종목 중 공인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공인 및 연장 승인을 신청한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6개 종목, 2003년도에 6개 종목, 2004년도에 7개 종목, 2005년도에 23개 종목, 2006년도에 15개 종목, 2007년도에 17개 종목, 2008년도에 12개 종목, 2009년도에 12개 종목, 2010년도에 29개 종목, 2011년도에 31개 종목, 2012년도에 15개 종목, 2013년도에 35개 종목, 2014년도에 32개 종목, 2015년도에 29개 종목, 2016년도에 36개 종목, 2017년도에 29개 종목, 2018년도에 42개 종목, 2019년도에 39개 종목, 2020년도에 23개 종목, 2021년도에는 34개 종목이 공인 신청함(〈표 3-1〉 참조).

〈표 3-1〉 연도별 공인 신청 현황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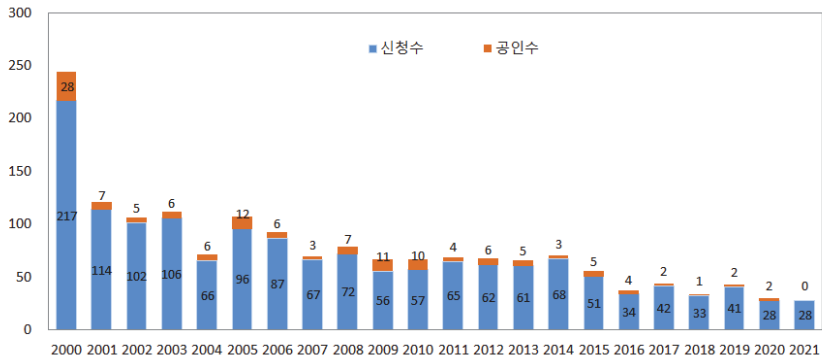
연도	신청 자격 수		공인자격 수	공인율
	신규 신청	재공인 (연장 승인 포함)		
2000	217	-	28	12.9
2001	114	-	7	6.1
2002	102	6	5	4.9
2003	106	6	6	5.7
2004	66	7	6	9.1
2005	96	23	12	12.5
2006	87	15	6	6.9
2007	67	17	3	4.5
2008	72	12	7	9.7
2009	56	12	11	19.6
2010	57	29	10	17.5
2011	65	31	4	6.2
2012	62	15	6	9.7
2013	61	35	5	8.2
2014	68	32	3	4.4

연도	신청 자격 수		공인자격 수	공인율
	신규 신청	재공인 (연장 승인 포함)		
2015	51	29	5	9.8
2016	34	36 ¹⁶⁾	4	11.8
2017	42	29 ¹⁷⁾	2	4.8
2018	33	42	1	3
2019	41	39	2	4.8
2020	28	23	2	7.1
2021	28	34	0	0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 연도별 공인 신청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1]과 같이 공인 신청 자격 수는 매년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매년 약 6,000여 개의 민간자격이 등록하고 있고, 2021년 9월 30일 기준 PQI에 등록된 민간자격 총 44,542개 상황과 대비되는 현상임.

[그림 3-1] 연도별 공인 신청 추세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16) 신청하였으나 접수가 반려된 2개 종목을 제외한 수치임.

17) 신청하였으나 접수가 반려된 1개 종목을 제외한 수치임.

- 공인제도 참여가 저조한 이유의 하나로 공인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자격 시장에서는 등록 여부만으로도 자격 수요가 충분히 있으며, 적절히 운영될 경우 수요자에게 자격의 공신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김덕기 외, 2015).

2.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현황

- 22년간(2000~2021년) 주무부처별로 국가공인 신청 자격 종목 수를 살펴본 결과, 전체 2,025개 종목의 공인 신청 중 1,553개 종목이 신규 공인 신청되었으며, 472개 종목이 재공인(연장 승인) 신청됨.
- 신규 공인 신청 건수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341개 종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교육부가 307개 종목, 산업통상자원부가 282개 종목, 문화체육관광부가 153개 종목, 고용노동부가 95개 종목, 국토교통부가 67개 종목, 농림축산식품부가 59개 종목, 기획재정부가 46개 종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8개 종목, 금융위원회가 35개 종목, 행정안전부가 23개 종목, 경찰청이 17개 종목, 법무부가 15개 종목, 산림청이 10개 종목, 방송통신위원회가 10개 종목, 소방청이 8개 종목, 해양경찰청이 7개 종목, 여성가족부가 6개 종목, 중소벤처기업부가 5개 종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개 종목, 조달청이 3개 종목, 특허청이 3개 종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개 종목, 환경부가 2개 종목, 농촌진흥청이 2개 종목 등의 순으로 나타남. 또한 기타 주무부처 미소관 10개 종목¹⁸⁾이 신청됨(〈표 3-2〉 참조).

18) 미소관 자격은 2008년 민간자격 등록제 도입 이전의 공인 신청 자격임.

〈표 3-2〉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자격 종목 수

주무부처	연도	2000~20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6년						
방송통신위원회		10	0	0	0	0	0	10
금융위원회		24	2	2	2	2	3	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0	0	0	0	0	2
공정거래위원회		1	0	0	0	0	0	1
기획재정부		46	0	0	0	0	0	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3	2	8	3	4	38
교육부		287	4	5	5	3	3	307
법무부		15	0	0	0	0	0	15
행정안전부		15	0	1	4	1	2	23
문화체육관광부		144	2	1	2	3	1	153
농림축산식품부		35	5	6	6	4	3	59
산업통상자원부		250	12	6	7	5	2	282
보건복지부		317	5	3	5	5	6	341
환경부		2	0	0	0	0	0	2
고용노동부		90	1	1	1	1	1	95
여성가족부		5	0	0	0	1	0	6
국토교통부		60	2	3	1	0	1	67
중소벤처기업부		1	2	1	0	0	1	5
외교부		0	0	1	0	0	0	1
관세청		1	0	0	0	0	0	1
조달청		3	0	0	0	0	0	3
경찰청		17	0	0	0	0	0	17
소방청		8	0	0	0	0	0	8
산림청		10	0	0	0	0	0	10
농촌진흥청		2	0	0	0	0	0	2
특허청		0	3	0	0	0	0	3
해양경찰청		7	0	0	0	0	0	7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	0	0	1	4
미소관		10	0	0	0	0	0	10
신규 공인 소계		1,381	42	33	41	28	28	1,553
재공인(연장 승인)		305	29	42	39	23	34	472
합계		1,686	71	75	80	51	62	2,025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54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21)

- 초기에는 주무부처가 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일부 부처에 공인 신청이 집중되었으나, 횡수를 거듭할수록 해당하는 주무부처가 확대되는 추세임.
- 교육부는 초기 다른 부처에 비해 많은 연간 약 20개 정도의 공인 신청을 받고 있었으나, 2014년 이후 공인 신청 건수가 한 자릿수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경우 2000년에 전체 공인 신청 건수의 34%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신청 비중이 감소하여 2019년에는 전체 공인 신청 건수의 12%로 급락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00년에 전체 공인 신청 건수의 14%였으나 2020년에는 4%로 나타남.

제2절 22년간(2000~2021년) 공인 조사 결과¹⁹⁾

1. 연도별 공인 조사 결과 현황

- 공인 조사의 총배점은 각 사업 연도별 210점(2000년), 250점(2001년), 220점(2002년~현재)으로 변함. 과년도 조사·연구 결과 기준 적용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 사업 연도에서 총배점의 70% 이상의 평가 점수를 얻은 ‘보통(양호)’ 이상을 공인 추천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2007년 「자격기본법」 개정으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가 ‘자격정책심의회’로 변경되었고, 심의를 상정하는 업무가 주무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민간자격 공인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처별로 공인 추천 대상 종목을 선정하여 자격정책심의회에 심의·상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난 22년간(2000~2021년)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한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2016년도에 171개 종목, 2017년도에 2개 종목, 2018년도에 1개 종목, 2019년도에 2개 종목, 2020년도에 2개 종목, 2021년도에 0개 종목이 총점의 70% 이상을 얻었음(〈표 3-3〉 참조).

19) 이하에서는 2016년 공인 조사·연구에 따른 신규 공인 종목이 추가(4개 종목)된 이후인 2016년 10월 기준으로 공인 현황을 분석함.

〈표 3-3〉 공인 조사 결과 평가 점수별 현황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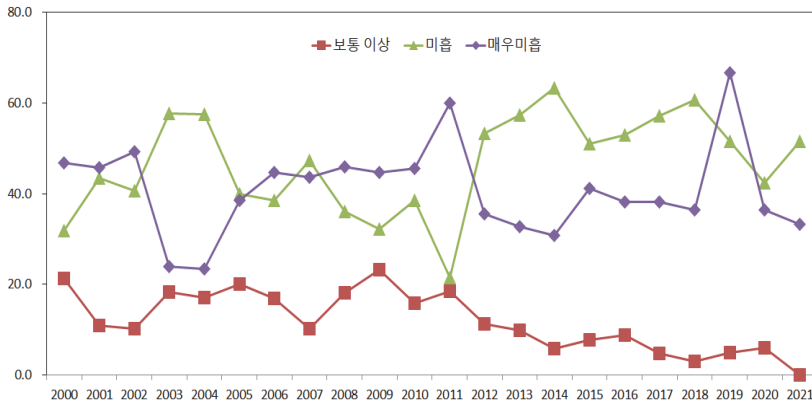
연도 평가 결과	2000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우수	40	0	0	0	0	0	40 (3.0)
보통 (양호)	131	2	1	2	2	0	138 (10.5)
미흡	497	24	20	17	14	17	589 (44.7)
매우 미흡	475	16	12	22	12	11	548 (41.6)
부적합	3	0	0	0	0	0	3 (0.2)
소계	1,146	42	33	41	28	28	1,318
금지	228	-	-	-	-	-	228
공인 신청 취소	7	-	-	-	-	-	7
총계	1,381	42	33	41	28	28	1,553
현장조사	336	9	6	5	4	1	361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 신규 공인 신청 종목의 평가 점수별 특성을 분석하면, 22년간 ‘우수’ 등급을 받은 종목은 총 40개로 전체 1,318개 종목 중 3.0%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우수’ 등급 다음으로 높은 ‘보통’ 등급 역시 22년간 총 1,318개 종목 중에서 138개 종목(10.5%)으로 ‘보통’ 이상의 등급이 매우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반해 ‘미흡’과 ‘매우 미흡’ 등급은 각각 589개 종목(44.7%), 548개 종목(41.6%)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연도별 평가 점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2]와 같음.
 - 공인 추천 기준인 ‘보통 이상’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공인제도를 통한 우수한 민간자격의 발굴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나, 2011년 이후 ‘매우 미흡’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 민간자격 전반에 대한 질 제고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2] 연도별 평가 결과 추이(2000~2021년)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2. 최종 공인 결과(2000~2021년)

가. 공인자격

- 자격정책심의회 이후, 최종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종목은 2000년도 28개 종목, 2001년도 7개 종목, 2002년도 5개 종목, 2003년도 6개 종목, 2004년도 6개 종목, 2005년도 12개 종목, 2006년도 6개 종목, 2007년도 3개 종목, 2008년도 7개 종목, 2009년도 11개 종목, 2010년도 10개 종목, 2011년도 4개 종목, 2012년도 6개 종목, 2013년도 5개 종목, 2014년도 3개 종목, 2015년도 5개 종목, 2016년도 4개 종목, 2017년도 2개 종목, 2018년도 1개 종목, 2019년도 2개 종목, 2020년도 2개 종목, 2021년도 0개 종목으로 총 135개 종목임(〈표 3-1〉 참조).
- 공인자격의 유효기관 만료 및 폐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3-4〉 참조).
 - 2003년에 당시 노동부 소관의 회계정보처리사와 2005년에 행정자치부 소관의 정책분석평가사 2개 종목이 공인 취소됨.
 - 2011년에는 운영상의 이유로 고용노동부 소관의 사출금형제작사 등 12개 종목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한국어교육능력 1개 종목 총 13개 종목이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음.
 - 2013년에는 1개 종목, 2014년 2개 종목이 재공인 연장이 되지 않았음.
 - 2019년 2개 종목이 공인 기간 만료되었으며, 3개 종목이 재공인 조사 결과에 따라 재공인 연장이 되지 않았음.
 - 2021년 9월까지 3개 종목이 취소되고, 35개 종목이 공인 만료됨에

따라 총 96개 공인자격 종목이 운영되고 있음.

〈표 3-4〉 연도별 공인, 공인 만료 및 취소 현황

연도	신청 자격 수		공인자격		만료 및 취소*	
	신규 신청	재공인 (연장 승인 포함)	종목 수	공인율	만료*	취소
2000	217	-	28	12.9		
2001	114	-	7	6.1		
2002	102	6	5	4.9		
2003	106	6	6	5.7		1
2004	66	7	6**	9.1		
2005	96	23	12	12.5		1
2006	87	15	6	6.9		
2007	67	17	3	4.5	1	
2008	72	12	7	9.7		
2009	56	12	11	19.6		
2010	57	29	10	17.5	1	
2011	65	31	4	6.2	13	
2012	62	15	6	9.7	1	1
2013	61	35	5	8.2	1	
2014	68	32	3	4.4	2	
2015	51	29	5	9.8	1	
2016	34	36 ²⁰⁾	4	11.8	2	
2017	42	29 ²¹⁾	2	4.8	4	
2018	33	42	1	3	2	
2019	41	39	2	4.8	5	
2020	28	23	2	7.1	1	
2021	28	34	0	0	1	

주) * 만료: 재공인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재공인 심사 결과 부적합. 취소: 공인자격 관리 운영 부실로 인한 주무부처의 공인 취소.

** 동일한 자격(정보보호전문가)에서 다른 등급이 공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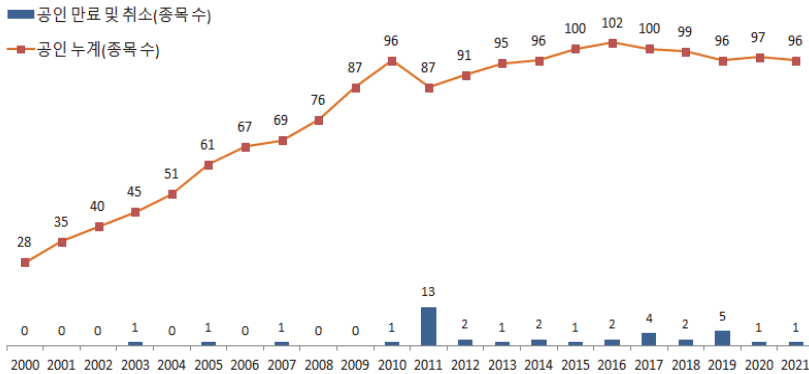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20) 공인신청을 하였으나 접수가 반려된 2개 종목을 제외한 수치임.

60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21)

- 공인 민간자격 신규 추가 및 만료 등을 반영한 연도별 공인 누계를 살펴보면, [그림 3-3]과 같이 2000년 28개 자격 종목을 시작으로 2021년 10월 기준 96개 자격 종목이 운영되고 있음.
- 등록 자격이 급격히 증가²²⁾한 것과 달리, 2016년 이후 공인자격 수는 유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3-3] 연도별 공인자격의 누계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나. 공인율

- 제도 시행 초기인 2000년에는 108개 기관에서 217개 자격의 공인 신청을 하였고, 이 중 28개 자격만 공인되어 전체 신청 자격 수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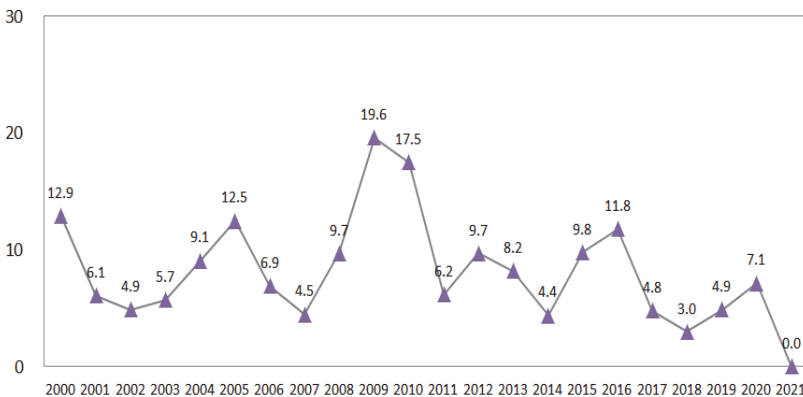
21) 공인신청을 하였으나 접수가 반려된 1개 종목을 제외한 수치임.

22) 매년 약 6,000여 개 민간자격이 등록하고 있고, 2021년 9월 기준 44,060개 민간자격이 등록되어 있음.

12.9%가 공인되었음. 2000년 이후 22년 동안 3.0~19.6%의 공인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²³⁾

- 연도별 공인율을 살펴보면, 2000년 12.9%를 시작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2018년 3.0%(33개 자격 공인 신청 대비 1개 자격 공인)로 가장 낮은 공인율을 보였고, 2009년 19.6%(56개 자격 공인 신청 대비 11개 자격 공인)로 가장 높은 공인율을 기록함.
- 연도별 공인율은 대체적으로 10% 전후에서 변동하는 모습을 나타냄. 2020년의 공인율은 7.1%로 28개 자격 공인 신청 대비 2개 자격이 공인되었고, 2021년도에는 28개 공인신청 자격 중 공인 추천 대상이 없음.

[그림 3-4] 연도별 공인율 변화 추이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23) 이후 2002년부터 공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재공인 신청도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나, 재공인은 기존 공인자격이 공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인 신청 자격 수 대비 공인받은 자격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공인율 분석에서는 제외함.

제3절 소관부처 및 기관별 현황

1. 소관부처별 현황

- 2021년 8월 기준, 공인 민간자격은 17개 부처 소관으로 96개가 운영되고 있음.
- <표 3-5>에서 소관부처별 분포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체 공인 민간자격의 21.9%에 해당하는 21개 자격을 관리하며, 이어 교육부가 19개 자격으로 전체 자격의 19.8%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가 11.5%, 산업통상자원부가 9.4%, 기획재정부가 8.3% 등의 순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 소관부처별 공인 민간자격 현황

[단위: 개, (%)]

소관부처	자격 수(2021. 8.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1(1.0%)
금융위원회	11(11.5%)
기획재정부	8(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21.9%)
교육부	19(19.8%)
법무부	1(1.0%)
행정안전부	3(3.1%)
문화체육관광부	5(5.2%)
농림축산식품부	2(2.1%)

소관부처	자격 수(2021. 8.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9(9.4%)
보건복지부	4(4.2%)
고용노동부	1(1.0%)
국토교통부	3(3.1%)
관세청	1(1.0%)
경찰청	3(3.1%)
산림청	3(3.1%)
특허청	1(1.0%)
총 17개 부처	총 96개 자격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 2021년 8월 기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전체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소관부처: 17개
 - 종목 수: 96개
 - 자격 운영 기관: 58개 기관

2. 공인 민간자격 기관별 현황

- 공인 민간자격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12개 기관, 2001년도에 7개 기관, 2002년도에 5개 기관, 2003년도에 7개 기관, 2004년도에 7개 기관, 2005년도에 10개 기관, 2006년도에 4개 기관, 2007년도에 3개 기관, 2008년도에 5개 기관, 2009년도에 7개 기관, 2010년도에 9개 기관, 2011년도에 4개 기관, 2012년도에 6개 기관, 2013년도에 2개 기관, 2014년도에 3개 기관, 2015년도에 5개 기관, 2016년도에 4개 기관, 2017년도에 2개 기관, 2018년도에 1개 기관, 2019년도에 2개 기관, 2020년도에는

1개 기관이 민간자격 종목을 공인받음.

- 자격 폐지, 공인 취소 및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관들을 제외하면, 2021년 10월 기준으로 58개 공인 민간자격 관리기관에서 총 96개 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8월 기준으로 96개 공인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은 총 58개이며, 기관별로 관리·운영되는 공인 민간자격의 수는 <표 3-6>과 같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10개 자격, 한국생산성본부 가 9개 자격, 한국금융연수원이 6개 자격을 운영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3개 기관(5.2%)이 총 96개 공인 민간자격의 약 26.0%에 해당하는 25개 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 2020년도 공인된 2개 자격(보행지도사, QTQi)의 관리기관은 모두 기존 공인 민간자격 관리기관으로 신규 민간자격 관리기관의 공인 실적은 없었음.

〈표 3-6〉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별 자격 수

(단위: 개)

시행 기관	자격 수	시행 기관	자격 수
대한상공회의소	10	한국생산성본부	9
(사)한국금융연수원	6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3
(재)한국데이터진흥원	3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원	2
(사)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2	한국세무사회	2
(사)한국창의인성교육연구원	2	(사)한국정보평가협회	2
(사)한자교육진흥회	2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2
사단법인 보험연수원	2	매일경제신문사	2
삼일회계법인	2	한국경제신문	2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1
(사)법국민연예생활실천운동본부	1	(사)한국포레스텍학회/한국인터넷진흥원	1
(사)신용정보협회	1	(사)한국행정관리협회	1
(사)한국경비협회	1	(재)국제원산지정보원	1
(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1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1
(사)한국농아인협회	1	(주)피씨티	1
(사)한국분재조합	1	KBS한국방송공사	1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1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
(사)한국수목보호협회	1	대한정보통신기술(합)	1
(사)한국애견협회	1	도로교통공단	1
(사)한국어문화회	1	신용회복위원회	1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1	한국공인회계사회	1
(사)한국열쇠협회	1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1
(사)한국원가관리협회	1	한국농어촌공사	1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1	한국발명진흥회	1
(사)한국정보관리협회	1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1
(사)한국정보화진흥원	1	한국실내건축가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	1	한국옥외광고협회	1
(사)한국중이접기협회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1
(사)한국주거학회	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
(사)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1	(사)한국직업연연구진흥원	1

총 58개 시행 기관 96개 종목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 공인 민간자격을 시행하는 58개 기관의 사업자 번호상 기록된 정보를 토대로 시행 기관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표 3-7>과 같음.
- 기관 유형은 비영리 법인, 영리 법인으로 구분 가능하며, 이 중 비영리 법인이 50개 기관으로 전체의 86.2%, 영리 법인이 8개 기관으로 전체의 13.8%로 나타남.

<표 3-7>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유형(법인 번호 분류상)

[단위: 개, (%)]

기관 유형	기관 수
비영리 법인	50(86.2)
영리 법인	8(13.8)
총 2개 분류	총 58개 기관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 공인 민간자격을 시행하는 기관들의 등록 주소지는 58개 기관 중 50개 기관(86.2%)이 서울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됨(<표 3-8> 참조).
- 공인 민간자격 시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반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방에 소재하는 8개의 기관 중 충남과 전남, 강원 등 세 곳을 제외하고는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들이 모두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소재함.

〈표 3-8〉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소재지

[단위: 개, (%)]

시도 구분	기관 수
강원	1(1.7)
경기	1(1.7)
대구	1(1.7)
대전	3(5.2)
서울	50(86.2)
전남	1(1.7)
충남	1(1.7)
총 7개 지역	총 58개 기관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제4절 2021년도 공인 신청 민간자격의 주요 특징 분석

1. 민간자격 신규 공인 신청 현황

가. 공인 신청 경험

- 2021년도 신규 공인 신청 28개 자격에 대한 공인 신청 경험을 살펴 보면 〈표 3-9〉와 같음.
 - 금년도 신규 공인 신청 자격의 평균 공인 신청 횟수는 3.6회로, 전년도 까지 신규 공인을 신청하였다가 공인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민간자격이 전체 신규 공인 신청 민간자격 종목(28건) 중 21개(75.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들 자격 중 3회 이상 신규 공인을 신청한 민간자격은 14건으로,

이는 전체의 50.0%임.

-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공인 신청한 자격도 7개로 전체의 25.0%를 차지하고 있음.

〈표 3-9〉 2021년 신규 공인 신청 자격의 공인 신청 경험

공인 신청 경험	없음	1~2회	3~5회	6~10회	10회 이상
자격 종목 수	7 (25.0%)	7 (25.0%)	7 (25.0%)	5 (17.9%)	2 (7.1%)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나. 공인 신청 민간자격 관리기관

- 공인을 신규로 신청한 28개 자격 종목을 기준을 민간자격 관리기관의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23개(8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기와 대전이 각각 3개로 나타났음.
 - 공인 신청 민간자격 관리기관의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매우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표 3-10〉 2021년 신규 공인 신청 민간자격 관리기관의 지역

지역	서울	경기	대전	합계
기관 수	23 (82.1%)	3 (10.8%)	2 (7.1%)	28 (100.0%)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 반복적으로 공인 신청을 하는 종목·특정 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특정 분야에 신청 자격이 편중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향후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존 공인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에서 4개(14.3%) 자격 종목을 공인 신청하였음.
 - 전년도(6개, 21.4%)에 비해 신규 민간자격 관리기관의 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 공인자격으로의 신규 진입 및 퇴출의 경직성

- 2021년도의 경우, 28개 공인 신청 자격 종목 중 현장심사 1개 종목 그리고 최종 공인 추천 대상은 없었음.
- 2021년도 기공인자격의 재공인 신청 대상 35개 자격 종목 중 34개 (97.1%)가 재공인을 신청하여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21년 공인 조사·연구 결과 공인 민간자격 제도에서 산업 수요 및 기관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공인자격이 진입 및 퇴출되기보다는 대부분이 재공인을 통해 공인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규로 공인자격으로 진입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인제도의 경직성으로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민간자격의 질 제고 보다는 민간자격 시장에서 공인자격의 독점 현상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민간자격의 유연성 결여가 우려됨.

라. 재공인 신청 자격의 검정 실적

- 재공인 및 연장 공인 신청 34개 종목 중 32개 종목의 최근 3년간 (2018~2020년) 검정 응시자 및 자격 취득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3-11>과 같음.
 - 전반적으로 응시자 수 및 취득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는 공인 민간자격의 실질적 활용성이 국가기술자격에 비해 적기 때문으로 판단됨.²⁴⁾
 - 특히 2020년도에는 급격한 감소를 보였고, 이는 코로나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

<표 3-11> 최근 3년 재공인 신청 자격의 검정 현황(2018~2020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응시자 (감소율)	337,026 (-)	330,802 (1.8)	253,158 (23.5)
취득자 (감소율)	145,826 (-)	143,008 (1.9)	126,089 (11.8)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24)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수 및 취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제5절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

1. 개최 배경 및 목적

가. 개최 배경

- 민간자격 공인 조사연구 심의위원회(2005년)에서 공인 민간자격 관리 기관이 공인 이후에도 관리·운영 능력 및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됨.
- 이에 2005년 11월에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회’를 최초로 개최 하였고, 민간자격 제도의 보편적인 문제점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소개 하여 민간자격 관리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 관리·운영 사례를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13년에는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간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함.
- 2014년에는 「자격기본법」 개정에 따른 사전 등록제가 실시되는 등 제도상에 많은 변화가 있어 민간자격 관리자들과 함께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회를 개최함.
- 2015년에는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격 관리·운영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변화된 재공인 조사·연구 기준 및 제출 평가 자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취득자 사후 관리 차원에서의 공인 민간자격 유효기간 설정에 관한 내용을 토의

하고, 각 공인자격 관리자 및 실무자들 간 상호 정보 교환 및 교류의 시간을 가졌음.

나. 연도별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의 주요 내용

- 2006년도 연수회에서는 공인 민간자격 관리 기관이 공인 민간자격 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스스로를 진단하여 양질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격 관리·운영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 관리·운영 사례를 발굴하여 선의의 경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07년도 연수회에서는 8개년간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과년도 연수를 통한 수차례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재공인 조사·연구 시 매번 반복해서 도출되는 공인 민간자격 관리·운영의 지적 사례를 소개하고 개선 방향을 발표하였음.
- 2008년도 연수회에서는 「자격기본법」의 전면 개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개정으로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가 제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자격 제도의 향후 시행 방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
- 2009년도 연수회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자격 체계의 개발을 주제로 연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간자격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자격 관리자가 향후 민간자격을 신설 및 개발하는 경우에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10년도 연수회에서는 민간자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 및 거

짓·과장 광고 사례, 그리고 신설 시 주요 고려 사항을 주지시켜 민간자격 등록 시 금지 분야에 해당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음. 또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운영 기관의 사례(사후 관리 및 취업 지원, 시스템 도입 및 활용, 해외 진출 등)를 소개하여 향후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 2011년도 연수회에서는 민간자격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리뉴얼에 따른 이용 방법 안내, 그리고 민간자격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교육하였음. 또한 최근 신설된 국가공인자격 협회의 주요 기능 및 공인 민간자격 관리 기관의 자격 관리·운영 사례 등을 소개하였음.
- 2012년도 연수회에서는 민간자격 등록 절차 및 금지 분야, 민간자격 공인제도, 국가기술자격 검정 절차에 대한 안내, 소비자 피해 사례 및 부당 광고 사례 등을 소개하였음. 또한 건전한 민간자격 시장을 향한 자율 기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민간자격 관리자 윤리 강령 선언식’이 있었음.
- 2013년도 연수회에서는 「자격기본법」의 개정 내용 안내와 함께 공인 민간자격 관리 우수 사례(관리 우수 사례, 활용 우수 사례), 공인 민간자격의 민원 처리 방안, 국가기술자격의 문제 출제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 졌음.
- 2014년도 연수회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과정평가형 민간자격 운영 방향, 민간자격 관리·운영 주의 사항(민간자격 지도·점검 추진 결과를 중심으로), 시험 관리의 기본 원칙, 2014년 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리·운영 사례,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방향에 대

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음.

- 2015년도 연수회는 자격 광고의 표시 의무, 개인 정보 수집 및 관리 방안,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예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음.
- 2016년도 연수회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관련 법령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 공인자격 관리자 공인자격 만료 및 폐지 등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고, 검정 시행 관리 및 시험 지부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등 참고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들에게 검정 시행과 관련된 공인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을 개편,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의 자리를 마련하였음.
- 2017년도 연수회에서는 국가 전문 자격 합격률 안정화 방안과 전문 자격 출제 관리 시스템 및 활용 사례 소개를 통해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들이 관리·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 재공인 조사 중 공인 사항의 임의 변경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공인 이전 취득자 완화 검정 시행 승인 신청 및 심의 절차, 공인 사항의 변경 승인 신청 및 심의 절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자격 표시 광고 시 유의 사항, 관련 법령 등의 공인 민간자격 관리·운영 시 유의 사항 등의 내용 제시하고,
 - 공인 민간자격의 활용 현황 및 기관의 활용성 제고 추진 사례를 발표하여 공인 민간자격 관리·운영 관련 최근 동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간의 정보 교환 자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인 민간자격의 관

리·운영에 있어 관리자들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여 전반적인 민간자격 시장의 활성화를 간접 지원하였음.

- 2018년도 연수회에서는 민간자격 제도가 일부 개선됨에 따라 정부의 제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와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를 통합 실시하였음.
 - 민간자격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민간자격 제도가 일부 개선됨에 따라 자격 등록 요건 강화 등 민간자격 제도 개선 방향, 민간자격 표준약관(안) 도입에 따른 활용 방안을 소개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인 민간자격 검정 시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운영 사례를 소개함.
- 2019년도 연수회에서는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국가역량체계(KQF) 구축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안), 2019년 재공인 조사·연구 결과에 따른 개선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들이 민간자격 제도 운영 시 참고할 만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였음.
- 2020년도 연수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되었던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를 대신하여 신규 공인 및 재공인 심사 관련 온라인 동영상을 제작하였음.
 - 온라인 콘텐츠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자격 공인 신청의 제도 설명, 제도 운영 구조, 신청 절차 및 요령, 평가 항목에 대한 설명, 변경 승인 사항 및 절차 등이 포함됨.

다. 금년도 연수 주요 내용

- 2021년도 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대규모 오프라인을 대신하여 온라인 연수(유튜브 생중계)로 실시하였음.
 - 2020년도에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일방향 온라인 연수였으나, 2021년도에는 쌍방향 온라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질 의응답 포함)로 진행하였음.
- 연수 내용은 시대 변화를 고려한 공인제도의 활성을 위해 민간자격관리자의 ‘비대면 자격검정 시범 운영 사례’와 ‘민간자격 공인 준비 사례’로 구성하였음.
 - 첫째, ‘비대면 자격검정 시범 운영 사례’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검정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비대면 검정의 준비 사항 및 절차, 추진 사항, 비대면 검정의 공정성 등의 내용을 구성함.
 - 둘째, ‘민간자격 공인 준비 사례’는 민간자격관리자들이 공인 신청 자료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기존 공인기관의 공인 준비 사항 및 절차, 유의 사항 등에 대한 경험으로 구성하였음.

제4장

결과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과

제2절 정책 제언

제4장 | 결과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과

1. 공인 조사연구 의의 및 성과

가. 공인 조사연구 의의

- 공인 조사연구는 민간자격 중 산업의 수요가 높고 관리 및 자격 수준이 우수한 자격 중 일부를 국가가 간접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적 인력 양성 기제로 활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공인 조사연구는 공인의 기준을 국가자격 수준 또는 상응하는 수준으로 관리되는 양질의 민간자격을 선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특히 한 국직업능력연구원은 엄격한 기준과 평가지침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공인 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임.

나. 공인 조사연구 성과

- 공인 조사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공인을 신청한 민간자격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공인 민간자격이 대내외적으로 공신력과 신뢰성을 갖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임.
- 이 밖에도 지속적인 공인의 질 관리 측면에서 공인 조사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됨. 2000년 이후 22년 동안 공인율이 3.0~19.6%를 나타내고 있어 공인 조사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공인 민간자격으로서 갖추어야 할 수준을 신청 편람을 통해 모두에게 공개하여 공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공인 조사 이후 지도·점검, 재공인 조사를 통해 그 수준을 유지·관리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 공인 조사연구로 인해 민간자격 시장에 양질의 자격 수준을 제시하고, 민간자격 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역할이 본 사업의 큰 성과로 파악됨.

2. 2021년도 공인 조사연구 결과 요약

가. 공인 신청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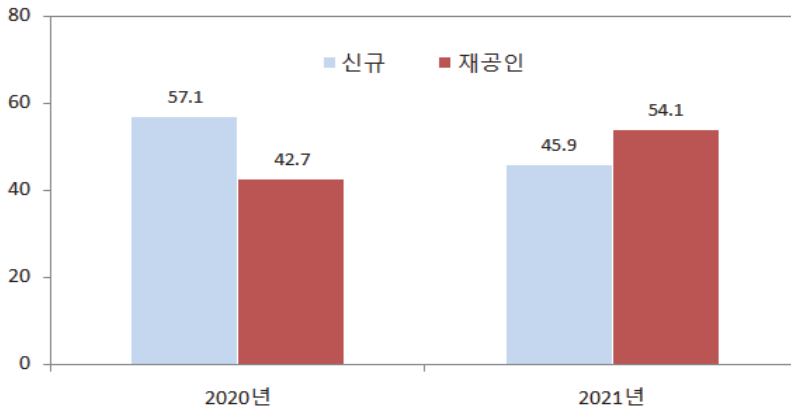
- 2021년도 신규 공인(28개) 및 재공인(34개) 신청 민간자격은 총 62개 종목으로 2020년도(신규 28개, 재공인 23개)에 비해 11개 종목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전년도에 비해 재공인 신청 비율의 증가에 의한

것임.

- 재공인 신청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11.4% 증가하였고, 향후 신규 공인 신청이 증가하지 않으며 공인제도는 재공인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1] 2020년과 2021년 공인 신청 결과(신규 공인, 재공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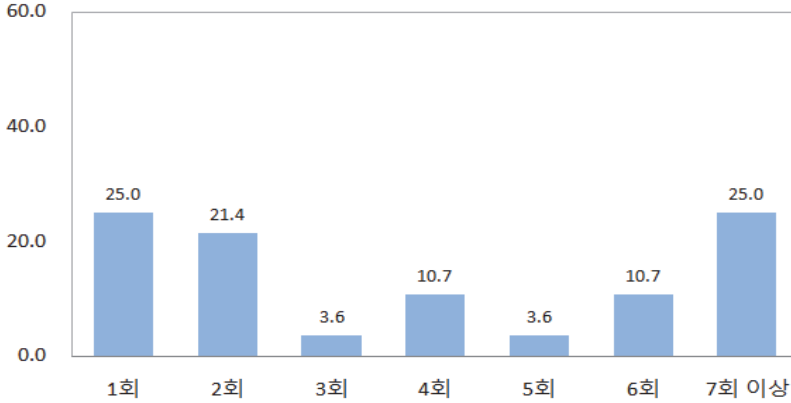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 2021년도 신규공인 신청 자격의 공인 신청 경험 횟수를 살펴보면, [그림 4-2]와 같이 유(U)자형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공인자격의 평균 공인 신청 횟수가 2.9회임을 고려하면, 5~6회 이상부터는 공인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홍보를 목적으로 한 반복 신청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4-2] 2021년 공인 신청 자격의 이전 공인 신청 경험

(단위: %)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나. 신규 및 재공인 조사연구 결과

- 2021년도 신규 공인 및 재공인 신청 민간자격 62개 종목을 신청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규 공인 28개 종목, 재공인 및 연장 승인 34개 종목임.
- 신규 신청 자격 종목의 조사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장심사 대상 자격 종목의 비율이 3.6%(1개 종목)이나, 공인 추천 대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 2021년 공인 민간자격 조사연구 결과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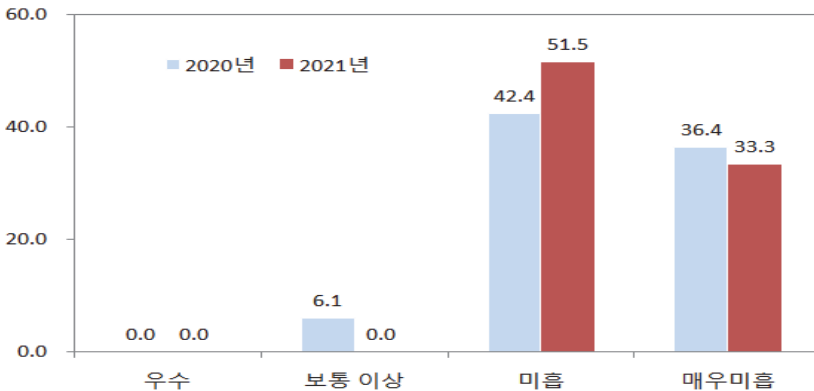
구분	신청 종목	심사 종목		공인 추천
		서류	현장	
신규 공인	28	28	1	0
재공인	33		33	32
연장 승인 ²⁵⁾	1	-	-	1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 2021년도의 경우 2020년의 공인 조사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보통 이상’을 얻은 자격 종목 수는 감소하였으나, ‘매우 미흡’과 ‘미흡’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4-3] 참조).

[그림 4-3] 공인 조사연구 결과 비교(2020년, 202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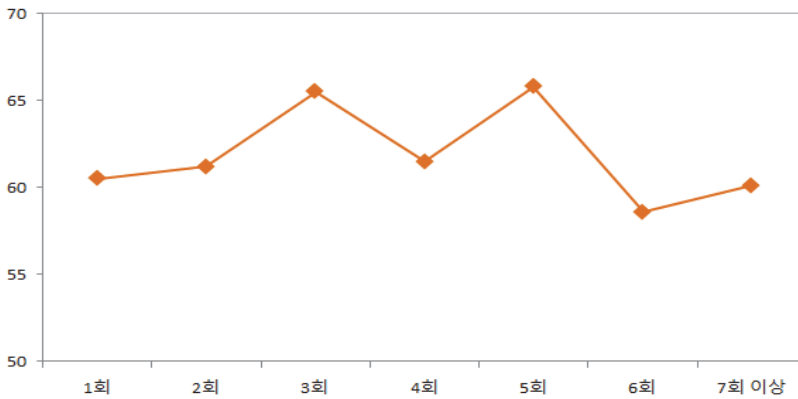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25) 연장 승인은 공인기간 연장의 타당성 등에 대한 교육·훈련계, 사업계 등의 의견수렴만 실시.

- 2021년도 기준으로 공인 신청 횟수에 따른 조사연구(서류심사 점수)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4-4]와 같음.
 - 공인 신청 3회까지는 조사연구 결과(점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회 이후에는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공인 신청 초기에는 공인을 위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으나, 이후에는 공인 신청을 포기하거나 일부 기관의 경우 문제점 개선을 통한 공인보다는 대외적인 홍보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4-4] 공인 신청 횟수별 평균 서류심사 결과(점수)

(단위: %)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다. 변경 승인 및 완화 검정 심사 결과

- 변경 승인 적합 여부 심의 결과, 2개 종목의 변경 내용에 대해 1개 종목은 '적합', 1개 종목은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주무부처 및 신청 기관에 해당 결과를 통지함.

〈표 4-2〉 2021년 변경 승인 및 완화 검정 심사 결과

(단위: 개)

구분	신청 종목	심사 결과	
		적합	부적합
변경 승인	2	1	1
완화 검정	-	-	-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내부 자료 인용 및 재구성.

제2절 정책 제언

1. 매년 공인 신청 참여와 공인 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공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의 개편 논의 필요**

- 등록 민간자격 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공인 신청 및 공인자격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향후 민간자격 시장에서 일부 특정 공인 민간자격관리자 중심의 시장 독점 현상이 우려됨.
 - 2019년도까지 공인 신청한 민간자격의 공인율은 10% 전후였지만,

2020년도에는 7.1% 낮아졌고, 2021년도에는 공인 추천 자격이 전무한 실정임.

- 이에 공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공인기준 완화, 민간자격 품질인증제 등 다양한 제도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등록 민간자격관리자, 공인 민간자격관리자, 공인자격 취득자, 정부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으로 제도 개편 논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표 4-3〉 공인제도 주요 개선 방안

개선(안)	내용	분석	
		기대 효과	고려사항
공인 기준 완화	공인 심사 기준 완화	- 공인자격 확대 - 등록자격 질 관리 유도	공인자격의 활용성 (학점인정 등) 저하
자격품질인증제 도입	공인과 등록 사이의 수준	등록자격 질 관리 유도	- 공인제도와 차별화 - 소비자 혼란 초래
공인자격 분야 구분(직업자격, 소양자격)	직업자격과 소양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	직업분야 자격 활성화	분야 구분 모호
공인자격 직무분야 지정 공모제	소관부처에서 필요한 직무분야 지정 후 공인 공모	- 국가 차원의 필요한 분야 집중 관리·활용 - 국가자격과 역할 분담	- 부처의 적극 참여 - 국가자격과 차별성

출처: 김덕기 외(2013), 주인중 외(2019)의 일부 내용 발췌 및 정리.

2.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이해관계자(신청사, 주무부처, 평가자 등)의 사업 참여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 기능 개선을 통한 민간자격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신규 공인 및 재공인 자격을 위한 조사연구와 민간자격 관리·운영의 전반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지원하고, 공인 민간자격의 지도 감독은 주무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인신청 - 조사연구(심사) - 사후관리(자격정보 수집·제공, 지도·점검)’를 위한 ‘민간자격 통합 관리 체계’를 통해 자격 관리의 주요 주체(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무부처, 공인 민간자격운영기관) 간 업무 및 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음.
- 공인 이후 자격의 시행 및 관리 부문의 질 관리가 매년 주무부처의 지도·점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무부처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공인 조사·연구 지적 사항 및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한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3.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자격 검정에서 비대면 검정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대면 검정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 2020년도 이후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인 민간자격관리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검정 시행에 많은 어려움(검정비용 증가, 검정장 확

보 등)으로 기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21년도 재공인 신청 민간자격의 2020년도 응시자는 2019년도 대비 2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년 증가하던 국가기술자격 응시자(필기시험) 수도 전년 대비 약 13.2% 감소²⁶⁾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양한 온라인 시험 솔루션 업체의 등장과 함께 오프라인 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부 민간자격관리자의 경우 비대면 검정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무분별한 비대면 검정의 시행으로 인한 검정의 공정성, 신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됨.

4. 공인 민간자격의 사후관리와 관련 자료의 대내외 요구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공인 신청서 및 평가 결과의 디지털화 관리**

- 자격 종목별 공인 신청 및 변경 승인 이력, 공인 신청서, 규정집, 공인증서 등은 제출 및 시기에 따라 공인 민간자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밀접하게 관련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세분화하여 DB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무부처 및 공인 민간자격 운영기관)가 정보의 접근 수준에 따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공인 신청 서류(신청서와 규정집)와 평가 결과는 사업 종료 후 재공인 심사, 공인 후 지도 감독, 변경 승인 심사, 민원 대응, 국회 등 외부

26) [www.q-net.or.kr/crf012.do?id=crf01209&gSite=Q&gId=\(검색일, 2021. 11. 15.\)](http://www.q-net.or.kr/crf012.do?id=crf01209&gSite=Q&gId=(검색일, 2021. 11. 15.))

기관의 관련 자료 요청에 활용되고 있음.

- 지난 22년간(2000~2021년, 2,025개 자격 종목) 공인 신청 서류와 평가 결과²⁷⁾ 자료가 매년 누적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간적·물적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5.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격 관리·운영 능력 제고를 위한 **민간자격관리자 컨설팅 개선 방안** 마련

- 현재 공인 신청 기관에 대한 컨설팅은 당해 연도 공인사업 종료 후 공인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므로 첫째, 자격 관리자가 전년도 지적된 사항을 보완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둘째, 공인 신청 기관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갖고 있음.
- 이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인사업 종료 후 시행되는 일회성 컨설팅 이외에 연수, 전문기관(국가공인자격협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7) 평가 결과(2,025개 종목×6명 심사위원×5쪽)만 약 60,000여 쪽으로 추정됨.

참고문헌

〈국내 자료〉

- 김덕기 외(2013). 『민간자격 질 관리 방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김덕기 외(2015).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5)』,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김덕기 외(2018).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8)』,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김덕기 외(2019).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9)』,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김덕기 외(2020).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2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박종성 외(2012).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박종성 외(2013).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박종성 외(2014).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서준호 외(2011).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주인중 외(2019).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 개편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최영렬 외(2016).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6)』,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최영렬 외(2017).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17)』,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큐넷(www.q-ne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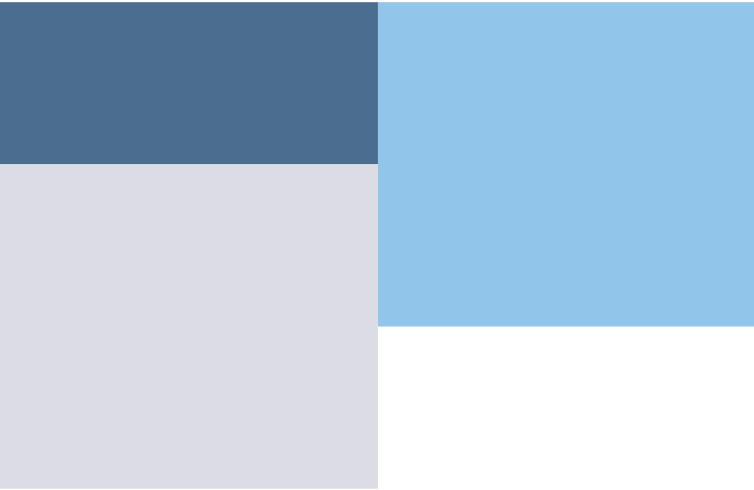
□ 저자 약력

- 김덕기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상진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동임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지운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 정향진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인중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윤여인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이창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전문위원
- 임경범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전문위원
- 한애리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김윤아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021)

- 발행연월일 2021년 12월 28일 인쇄
2021년 12월 31일 발행
- 발행인 류장수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화: (044)415-5000, 5100
팩스: (044)415-5200
- 등록일자 1998년 6월 11일
- 등록번호 제16-1681호
- I S B N 979-11-339-9671-1 93320
-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www.krivet.re.kr



비매품



9 791133 996711

ISBN 979-11-339-9671-1